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북한사회변동

2012-2013

시장화, 소득분화, 불평등

발간사

21세기 한국사회의 미래를 생각할 때 북한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북한사회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예측은 바람직한 통일한국을 성취하는 첫걸음으로, 분단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다. 나아가 최근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동북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갈등을 조율하고 지역 내 협력과 공존의 질서를 창출하기 위해서도 북한사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급선무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정보는 늘 불충분하며 예측은 부정확하다. 무엇보다도 북한사회가 가진 폐쇄적이고 이질적인 특성으로 인해, 외부의 연구자는 신뢰할만한 자료를 구하기 어렵고 현장 관찰도 쉽지 않다. 북한에 관한 공식적인 통계자료 역시 매우 제한되어 있어서 연구자들은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확인되지 않은 각종 소문과

대표성이 약한 사례들을 통해 북한사회 전반을 설명하는 것처럼 오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북한 연구가 어려움을 겪을 이유는 충분하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가 미비한 이유를 단지 불충분한 자료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동안 북한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은 주로 엘리트 중심, 평양 중심, 최고지도자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었고, 학계 또한 관성적으로 새로운 시선과 방법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로운 접근의 시기를 마련하고 진지한 태도로 북한에 접근한다면 부족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하고 균형 있는 해석을 도출할 가능성을 열 수 있을 것이다. 3만 명에 육박하는 탈북이주자의 존재, 북중접경지대를 통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인적·물적 교류의 장, 새로운 기술환경에

기반한 정보유통의 영향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북한연구의 방법론적 쇄신을 도모하는 일은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

이 연구는 현 상황에서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북한주민들의 생활에 대한 조사 자료에 기초한 것이다. 완벽한 직접조사에 비할 수는 없지만 이 조사를 통해 상당히 유의미한 변화의 실상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조사가 보여주는 바를 요약하면, 현재 북한에서는 지배층 중심의 공식영역과 피지배인민 중심의 일상생활영역 간에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평양을 중심으로 북한 정권의 공식담론에 근거한다면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과 지속성, 통합성이 크게 부각되겠지만, 일반주민들이 살아가는 지방의 장마당, 비공식적인 사회관계에 초점을 맞춘다면 북한은 현재 상당한 변화의 흐름 속에 놓여있다. 이 책의 부제로 제시한 시장화, 소득분화, 불평등은 북한이 겪고 있는 변화의 핵심적 특성을 논제화

한 것이다. 이런 사회경제적 변화가 아래로부터 어떤 동력을 만들어낼지, 북한의 지도부는 이 새로운 흐름에 어떻게 대응할지, 나아가 동북아의 격동하는 외부환경과는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게 될지에 관해서는 앞으로 치밀한 관찰과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이 조사연구가 정중동의 북한사회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중요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2014년 4월

박명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장

목차

제1장 / 연구 개요 14

- 1. 조사 목적 14
- 2. 설문내용 및 조사방법 17
- 3. 인구학적 배경변수별 특징 20
- 4. 조사 의의와 시사점 29

제2장 / 식의주 생활의 불평등 34

- 1. 사회적 기초로서의 일상 34
- 2. 식의주 실태와 지역별 생활수준 불균등 36
- 3. 소득수준별 식의주 생활의 불평등 64
- 4. 평가와 시사점 76

제3장 / 시장화와 소득분화 84

- 1. 시장화란 84
- 2. 경제의 시장화 90
- 3. 소득의 분화 118
- 4. 평가와 시사점 133

제4장 / 향후 연구에 대한 시사점 138


표목차

〈표 1〉	조사의 표본	17	〈표 22〉	도별 생활수준 비교	62
〈표 2〉	설문내용의 구성	19	〈표 23〉	시별 생활수준 비교	63
〈표 3〉	성별, 연령별 분포	21	〈표 24〉	인구사회학적 문항과 식의주 문항 교차분석 결과의 통계적 유의성 분포	66
〈표 4〉	조사 대상자의 탈북 전 최종 거주지 (빈도)	23	〈표 25〉	2013년 직업별 주식 구성 비교	67
〈표 5〉	북한에서의 교육수준별 응답자 분포	24	〈표 26〉	계층별 주식 구성 비교	70
〈표 6〉	북한에서의 직업별 응답자 분포	25	〈표 27〉	계층별 고기섭취 횟수 비교	71
〈표 7〉	북한에서의 당원 여부에 따른 응답자 분포	26	〈표 28〉	계층별 의류 구매 횟수	72
〈표 8〉	탈북 후 북한의 소식에 대한 접근성	27	〈표 29〉	계층별 살림집 유형 비교	73
〈표 9〉	남한친척의 유무에 따른 응답자 분포	27	〈표 30〉	장사경험 여부	91
〈표 10〉	결혼 상태에 따른 응답자 분포	28	〈표 31〉	성별 장사경험 여부	92
〈표 11〉	자녀의 수에 따른 응답자 분포	29	〈표 32〉	연령대별 장사경험자 비중	93
〈표 12〉	하루 식사 횟수	39	〈표 33〉	교육수준별 장사경험자 비중	93
〈표 13〉	주식의 구성	41	〈표 34〉	직업별 장사경험자 비중	94
〈표 14〉	고기 섭취 횟수	43	〈표 35〉	당원 여부별 장사경험 여부	95
〈표 15〉	의류 구매 횟수	45	〈표 36〉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	96
〈표 16〉	의류의 원산지	48	〈표 37〉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 종사기간	97
〈표 17〉	의류의 구입경로	50	〈표 38〉	연령대별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 종사기간	98
〈표 18〉	살림집 유형	53	〈표 39〉	직업별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 종사기간	99
〈표 19〉	살림집 장만 경로	55	〈표 40〉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별 종사기간	100
〈표 20〉	살림집 개조 희망사항	58	〈표 41〉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 종사 시 가장 컸던 애로사항(1순위)	101
〈표 21〉	가계 소득의 주요 지출 내역	60	〈표 42〉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 종사 시 가장 컸던 애로사항(2순위)	103
			〈표 43〉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별 애로사항(2순위)	104
			〈표 44〉	수입 중 뇌물 비중	105
			〈표 45〉	장사물건이나 사업용 원자재 출처	106

<표 46>	장사물건이나 사업용 원자재 출처별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	107
<표 47>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 종사 시 타인 고용 여부	108
<표 48>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 종사 시 타인 고용 규모	109
<표 49>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 종사 시 타인 고용 기간	110
<표 50>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 종사기간 별 타인 고용 규모	111
<표 51>	우선적 상거래 대상에 대한 인식(1순위)	113
<표 52>	우선적 상거래 대상에 대한 인식(2순위)	114
<표 53>	교육수준별 우선적 상거래 대상에 대한 인식(1순위)	115
<표 54>	직업별 우선적 상거래 대상에 대한 인식(1순위)	117
<표 55>	북한의 직종별 보수 및 소득수준(1992년 기준)	118
<표 56>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월평균 가구생활비 총합	120
<표 57>	장사나 부업을 통해 번 월평균 가구수입 총합	121
<표 58>	생활수준에 대한 시기별 인식	123
<표 59>	탈북직전 생활수준 인식별 장사나 부업을 통해 번 월평균 가구수입 총합	124
<표 60>	장사나 부업을 통해 번 월평균 가구수입의 5분위 격차	125
<표 61>	잘사는 직업에 대한 인식	126
<표 62>	친척과의 생활수준 비교	127
<표 63>	이웃과의 생활수준 비교	128
<표 64>	경제적 계층분화 이유에 대한 인식(1순위)	129
<표 65>	경제적 계층분화 이유에 대한 인식(2순위)	130
<표 66>	일상적인 고민 거리	132

그림목차

<그림 1>	하루 식사 횟수	39
<그림 2>	주식의 구성	41
<그림 3>	고기 섭취 횟수	43
<그림 4>	의류 구매 횟수	46
<그림 5>	의류의 원산지	49
<그림 6>	의류의 구입경로	50
<그림 7>	살림집 유형	53
<그림 8>	살림집 장만 경로	55
<그림 9>	살림집 개조 희망사항	59



제1장
연구 개요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제1장 연구 개요

1. 조사 목적

북한이 과연 변화하고 있는가는 학계의 오래되고도 근본적인 논쟁거리 중 하나이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 질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곧 북한 사회의 변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무엇을 설명하고 해석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할 시점이다. 물론 여전히 북한은 폐쇄적이고 권위적이며 전체주의적 성격이 강한 국가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이미 수많은 북한주민들이 국경을 넘나들고 있으며, 남한사회뿐만 아니라 심지어 영국, 캐나다, 미국 등 세계 각지로 이주행렬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북한을 ‘은둔의 왕국’(Hermit kingdom)으로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제 남한사회는 탈북이주민의 유일한 정착지가 아니며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나라들 중에 한 곳이 되고 있다. 또한 십수년 동안 활발하게 진행된 이주의 행렬만큼 북한사회 안에서도 다양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이 북한사회의 변동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러한 관심은 일회적 차원에서 그쳐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지 못하거나 아니면 특정한 대상이나 분야에 한

정된 한계를 가지는 경우가 많았다. 북한사회변동은 북한 사회구조들의 유의미한 변화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이때 사회구조는 규범과 가치, 행위와 관계, 문화적 현상 등을 포함한다. 다시 말해서 가치와 규범의 변화, 행위의 유형 및 관계 패턴의 변화, 새로운 문화적 현상 등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관찰해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북한사회변동의 속도와 방향성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북한사회의 변동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가, 그 속도를 조절하는 주요 요인은 무엇인가, 또한 북한사회가 어떤 미래와 지향을 향해 변화하고 있는가 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이것으로만 충분치 않다. 결국에는 지금까지 언급했던 북한사회 변동의 여러 측면을 어떻게 측정해 낼 것인가라는 실천적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북한사회의 변화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제한된 인원수의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고 이를 기초로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탈북자들에 대한 면접조사 결과는 그것을 통계적인 자료로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시계열적인 변화의 추세를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크다. 따라서 통계적으로 활용 가능하고 시계열적인 변화도 추적할 수 있도록 조사를 설계하여 진행하며 그동안 단편적으로 진행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으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2012년에 처음으로 북한사회변동조사를 설계하여 수행하게 되었다.

북한사회변동조사는 북한사회의 유의미한 구조적 변화를 측정하여 변동의 속도와 요인을 분석하고 변동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가시적이고 지속적인 데이터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북한사회변동조사는 기

존의 북한연구가 권력구조의 변화, 엘리트의 변동, 노선 및 정책의 변화 등과 같이 상부구조나 거시구조의 변화에 분석 초점이 맞추어진 데 대한 비판적 접근이면서 동시에 사회의 기초로서 일상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맞춘다. 조사의 주요한 범주에는 북한주민의 의식주 생활, 사회분화의 실태, 시장화의 양상과 변화 등이 포함된다.

의식주는 한 사회의 삶의 수준을 가장 간단하게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다. 또한 개인이 영위하는 의식주 생활의 수준은 그 사회에서 개인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들(정치, 경제, 사회적 자원을 포함)이 결합된 복합체로서 한 개인이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특히 사회주의적 요소와 시장경제적 요소가 공존하고 있는 북한사회에서 한 개인의 의식주 생활은 공식적인 제도와 규범의 영역을 넘어 비공식적인 제도와 규범의 영역을 포괄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주민의 의식주 생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장화, 소득 및 계층의 분화, 부패구조, 사유화 등과 같은 사회구조 전반의 변화를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북한사회변동조사는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를 통해 사회구조의 변화를 추적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를 토대로 북한의 점진적인 체제전환의 가능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동시에 이 조사는 통일에 대비하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의 축적이 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 2013년 북한사회변동조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진행되었음을 밝힌다. (IRB NO.1305/001-023)

2. 설문내용 및 조사방법

설문의 내용은 북한사회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귀하는 북한에 거주할 당시 제시된 지역들 중에서 가장 잘 사는 시, 중간 정도 사는 시, 가장 못 사는 시를 하나씩만 골라 괄호 안에 번호를 적어주세요?; “귀하는 북한을 나오기 직전에 북한주민 계층 비중이 어느 정도였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형식의 질문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형식의 질문을 통하여 비록 조사가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그들이 북한에 거주할 당시의 상황과 그들의 눈과 귀를 통해 인지된 북한주민들 삶의 양식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표 1〉 조사의 표본

조사기간	조사연도	2012년 4/6~6/2	2013년 6/13~7/16
	탈북연도	응답자	응답자
	2010	—	—
	2011	127	—
	2012	—	133
	총 계	127	133

북한이탈주민들을 통해 북한 거주 당시 삶의 양식을 조사하려면 탈북시기를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입국을 2012년에 하더라도 2008년에 탈북한 탈북민보다 2012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사회의 실태변화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타당하고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탈북과 입국의 시기의 간격이 길면

갈수록 북한을 떠난지 오래되어 북한사회의 변화에 대한 정보 부족과 험난한 삶의 과정 속에서 의식의 변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남한사회에서 정착기간이 길어도 정착과정에서 다양한 이유로 북한에서의 삶에 대한 인식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2012년, 2013년 북한사회변동조사는 2011년, 2012년 이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표 1〉에서 보듯 본 조사는 설문대상을 탈북년도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표본모집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만약 정부기관의 협조가 있었다면 좀 더 구조화된 조사를 하거나 접근가능한 모든 대상을 조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2011년 입국자가 2,706명, 2012년 입국자는 1,502명이지만,¹ 조사년도 기준으로 직전년도에 탈북하여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수는 훨씬 적어 조사대상자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작년에 이어 북한사회변동조사는 북한체제의 안정성 또는 불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구체적 실체들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표 2〉에 제시된 설문내용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북한이 겪고 있는 사회경제적 변화들이 정치 영역에서 정권의 안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북한 사회와 정권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진화해갈지를 평가하고 전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북한주민의 의식주 실태, 빈부격차의 요인과 구조, 시장경제화의 실태, 사회의 개방성, 인구사회학적 배경 등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뤄

1_ 통일부 홈페이지, "북한이탈주민 현황", <http://www.unikorea.go.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365> (2013년 8월 23일 접근).

진 북한사회변동조사는 생산적이고 실효적인 대북정책의 방향을 탐색하는 유용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 설문내용의 구성

범주	설문내용	
식의주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루 식사횟수 주식의 구성 고기 섭취 횟수 의류 구매 횟수 의류원산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류 주요 구매처 살림집 형태 살림집 장만경로 살림집 개조 희망사항 시기별 의식주 수준 평가
빈부격차의 요인과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 사회의 계층 구성 지역의 빈부격차 직업의 빈부격차 빈부격차의 발생요인 생활수준의 상대적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상생활의 고민거리 시기별 소속 계층에 대한 주관적 평가 공식 수입과 비공식 수입의 격차 수입의 주요 지출내용 총지출에서 뇌물의 비중
시장경제화의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수입 원천 자재/원료의 원산지 시장경제 활동의 애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노동의 실태 시기별 장사 단속의 정도 사유화의 대상
사회의 개방성 (2012년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치에 대한 관심 변화 경쟁의식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 지역으로의 이동성 변화

이 조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준수하며, 조사대상자들에게 조사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개인정보활용 및 보호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한 후 실시되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일정에 따라 연구원에서 조사가 이뤄지기도 하였으며, 일부는 조사연구원이 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하나원, 하나센터, 자유시민대학, 통일비전연구회 등 여러 단

체와 북한이탈주민들의 협조가 없었다면 이 조사를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조사에 협조해 준 모든 기관과 단체, 그리고 조사에 성실히 임해 준 모든 응답자들에게도 감사를 표한다.

3. 인구학적 배경변수별 특징

1) 성별·연령별·탈북-입국기간의 특징

〈표 3〉은 두 차례 조사의 대상자들의 성별, 연령별 분포를 보여준다. 2012년과 2013년 조사 응답자의 성별분포는 남녀가 각각 약 44%와 약 56%를 차지하고 있다.² 2012년도 조사의 약 53%가 20대 또는 30대이며, 40대는 약 27%이다. 2013년 조사의 응답자의 약 56%가 20대 또는 30대이며, 40대는 약 29%를 차지하고 있어 성별, 세대별 비율이 크게 차이나지는 않는다. 한국사회로 '직통'으로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현상이 앞으로 지속될지는 조금 더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통일부에 따르면 2003년 여성비율이 60%를 넘었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75%를 넘기도 하였으나, 2011년에 70%로 감소하고 2012년에는 약 72%로 나타난다. 통일부 홈페이지, <http://www.unikorea.go.kr/CmsWeb/viewPage.req?id=PG0000000365> (2013년 8월 23일 접근).

〈표 3〉 성별, 연령별 분포

단위: 명(%)

연령	2012		2013	
	남자	여	남자	여
20대	23(51.1)	22(48.9)	24(52.2)	22(47.8)
30대	11(47.8)	12(52.2)	17(58.6)	12(41.4)
40대	11(32.4)	23(67.7)	11(29.0)	27(71.1)
50대	5(38.5)	8(61.5)	7(43.8)	9(56.3)
60대 이상	6(50.0)	6(50.0)	0(0.0)	4(100.0)
합계	56(44.1)	71(55.9)	59(44.4)	74(55.6)

* Note: 괄호안의 숫자는 해당연령별 그리고 전체 남녀의 성비를 나타내며, 합이 100이 넘는 경우는 반올림 오차(rounding error)에 해당한다. 18세 1명, 19세 2명은 20대에 포함되었다.

응답자들의 탈북년도와 입국년도별 분포를 살펴보면 2012년 조사의 응답자들은 전원이 2011년에 탈북해서 2011년에 입국하였다. 2013년 조사의 응답자들 중 131명은 2012년에 탈북을 하여 2012년에 입국을 하였고, 2명은 2013년에 입국을 하였다. 이들 2명은 각기 2012년 9월과 12월에 탈북을 하여 2013년 2월과 3월에 입국을 하였다.

2012년, 2013년의 응답자들이 탈북 후 입국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약 3.57개월(표준편차=1.74), 3.37개월(표준편차=1.72개월)였다. 2013년 조사대상자의 탈북-입국의 평균기간이 2012년 조사대상자의 탈북 후 입국까지 걸린 평균기간보다 짧았다. 대부분의 조사대상자들이 2-5개월의 기간동안 탈북을 하고 남한으로 입국하였다. 2012년 조사의 응답자들의 약 68%는 탈북 후 입국까지 걸린 시간이 4개월 미만이었지만, 2013년 조사에서는 약 76%가 4개월 미만동안 북한에서부터 한국까지 이동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점차 남한에 입국하는 북한이

탈주민들이 제3국 등에 장기체류하다가 입국하기보다는 일단 탈북을 감행하면 빠른 시간 안에 남한으로 입국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고향·학력·직업별 특징

북한이탈주민들이 탈북하기 전 최종 거주지는 지역적으로 편중이 있을 수 밖에 없다. <표 4>에 의하면, 응답자의 대부분은 함경북도와 양강도 출신이다. 함경북도와 양강도 출신은 2012년 조사에서는 51.2%와 30.7%로 전체 응답자의 81.9%를, 2013년조사에서는 38.4%와 43.6%로 전체응답자의 82.0%를 차지하고 있다. 통일부에 의하면 2010년 12월까지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 중 함경북도 출신이 67.3%, 함경남도 출신이 9.4%, 양강도 출신이 7.5%이다.³ 이러한 통계는 1948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재북출신지 비율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로 최근의 탈북이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주로 발생하는 현상임을 반영하고 있다.

3.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1북한이탈주민 생활실태조사 기초분석 보고서』(서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1), p. 23.

4. 통일부 홈페이지, 2013년 8월 23일 접근.

<표 4> 조사 대상자의 탈북 전 최종 거주지 (빈도)

북한의 출신지	조사년도	
	2012	2013
평양	0	1
개성	0	1
남포	1	0
라선	1	0
평안남도	0	2
평안북도	1	6
함경남도	12	11
함경북도	66	51
자강도	0	0
양강도	39	58
황해남도	3	0
황해북도	3	0
강원도	1	2
무응답	0	1
합계	127	133

두 차례 조사의 응답자들 중 고등중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진 이들이 가장 많았다. <표 5>에 나타나듯이, 65.4%, 71.4%가 고등중학교 출신들이며,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이들은 약 10.2%, 16.5%를 차지하고 있다. 통일부가 발표한 2012년 1월 입국자 기준 재북학력 현황은 고등중학교가 70%, 전문대 9%, 대학이상 8% 등이다.⁴ 2013년 조사에서 전문학교 출신 응답자 비율이 2012년 조사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하여 11.3%를 차지하고 있다. 재북학력에 따라 북한사회를 이해하는 시각과 입장 차이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북한의 시장화 및 비공식적 경제활동에 적응하는 양상에도 차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조사에 중요한 변수로 포함하였다.

〈표 5〉 북한에서의 교육수준별 응답자 분포

단위: 명(%)

북한의 출신지	조사년도	
	2012	2013
대학교	13(10.2)	22(16.5)
전문학교	23(18.1)	15(11.3)
고등중학교	83(65.4)	95(71.4)
인민학교	4(3.2)	0(0.0)
무학	2(1.6)	1(0.8)
무응답	2(1.6)	—
합계(N)	127(100)	133(100)

북한에서의 직업별 응답자 분포를 보면 응답자들 중 노동자 출신의 북한이탈주민들이 가장 많다. 〈표 6〉에 볼 수 있듯, 재북직업이 노동자였던 응답자들이 37.0% 및 31.6%를 차지하고 있다. 노동자, 농민, 주부, 장사, 사무원의 비율은 2012년 조사에서는 72.6%였고, 2013년 조사에서는 75.2%이다. 전문가와 외화벌이 일꾼 등은 전체응답자의 10% 미만이었다. 통일부의 2012년 1월 입국자 기준 재북직업별 현황 자료에 의하면 노동자의 비율이 38%이고 무직부양도 50%에 이르며, 관리직과 전문직은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⁵ 이와 비교하면 두 차례 조사의 응답자들 중 전문가, 사무원, 군인 등의 비율은 상당히 높았다. 북한이탈

주민들이 북한에서 두 개 이상의 직업을 가졌을 개연성이 크지만, 본 조사에서는 북한에서의 주요 직업을 하나만 선택하도록 하였다.

〈표 6〉 북한에서의 직업별 응답자 분포

단위: 명(%)

북한에서의 직업	조사년도	
	2012	2013
노동자	47(37.0)	43(31.6)
농민	11(8.7)	4(3.8)
사무원	6(4.7)	13(9.8)
전문가 (교원, 의사, 기술자 등)	9(7.1)	11(8.3)
학생	8(6.3)	8(6.0)
군인	5(3.9)	6(4.5)
외화벌이군	3(2.4)	3(2.3)
장사	14(11.1)	18(13.5)
주부	14(11.1)	22(16.5)
무직 및 기타	8(6.3)	5(3.8)
무응답	2(1.6)	—
합계(N)	127(100)	133(100)

응답자들의 당원 여부에 따른 분포는 〈표 7〉에 나타나는 바와 같다. 2013년 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85.0%는 노동당원이 아니었다고 응답하고 있다. 2012년 조사대상자 18명의 당원들의 직업은 노동자(7명), 사무원(2명), 군인(3명), 그외 전문가, 학생, 외화벌이군, 주부 등이 각 1명이

⁵ 통일부 홈페이지, 2013년 8월 23일 접근.

있고 무직 혹은 기타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1명이었다. 2013년 조사 대상 장 중 당원 20명을 직업별로 분류해보면 사무원(6명), 노동자(6명), 전문가(2명), 군인(2명), 농민, 학생, 장사, 주부 등이 각 1명씩이었다.

〈표 7〉 북한에서의 당원 여부에 따른 응답자 분포 단위: 명(%)

당원여부	조사년도	
	2012	2013
당원	18(14.2)	20(15.0)
후보당원	0(0.0)	0(0.0)
비당원	107(84.3)	113(85.0)
무응답	2(1.6)	—
합계(N)	127(100)	133(100)

3) 탈북 후 북한소식 인지 및 남한친척의 유무

탈북자들은 탈북 후에도 북한소식을 자주 접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8〉에 나타나듯이,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2012년과 2013년에는 19.7%와 22.6%이다. 반면 북한 소식을 ‘거의 접할 수 없었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2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난다. 여러 연구보고서와 언론 인터뷰를 통하여 알 수 있듯 예전에는 인적왕래를 통한 소식전달이 주를 이루었었지만 근래에는 휴대전화 등을 통한 소식전달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제한적이지만 북한의 가족 및 친지들의 소식 등을 접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8〉 탈북 후 북한의 소식에 대한 접근성 단위: 명(%)

북한소식	조사년도	
	2012	2013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25(19.7)	30(22.6)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75(59.1)	76(57.1)
거의 접할 수 없었다	27(21.3)	27(20.3)
합계(N)	127(100)	133(100)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에 친척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 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9〉에 의하면, 남한에 친척이 있다고 응답한 북한이탈주민들은 2012년에는 62.2%, 2013년에는 65.4%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남한에 친척이 있는 경우의 탈북-입국기간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짧았다. 두 조사의 모든 응답자들 중 남한에 친척이 있는 경우 탈북-입국 기간이 평균 3.14개월(표준편차=1.45)인 반면, 친척이 없는 경우 탈북-입국 기간은 평균 4.17개월(표준편차=2.22)이다. 남한에 친척이 있는 경우 탈북자별 탈북-입국기간의 차이가 그다지 심하지 않으나, 친척이 없는 경우는 사례에 따라 그 기간 차이가 클 수도 있다. 이를 통해 남한에 먼저 이주한 가족이나 남한의 친척들이 탈북자들의 이동을 도와주는 흡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9〉 남한친척의 유무에 따른 응답자 분포 단위: 명(%)

남한친척	조사년도	
	2012	2013
없다	48(37.8)	46(34.6)
있다	79(62.2)	87(65.4)
합계(N)	127(100)	133(100)

결혼의 유무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였다. <표 10>이 보여 주듯이 2012년 조사부터 응답항목에 현재의 결혼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혼'을 포함하였다. 2013년 조사에서 미혼은 2012년보다 8.1% 감소한 37.6%였으며, 결혼은 9.3% 증가한 53.4%였고 이혼은 9.0%였다. 이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결혼상태에서 가족들과 함께 한국으로 입국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현상을 반영한다.

<표 10> 결혼 상태에 따른 응답자 분포 단위: 명(%)

결혼 상태	조사년도	
	2012	2013
미혼	58(45.7)	50(37.6)
결혼 (동거포함)	56(44.1)	71(53.4)
이혼	12(9.5)	12(9.0)
무응답	1(0.8)	—
합계 (N)	127(100)	133(100)

자녀의 수에 대한 조사는 남한에 있는 자녀만이 아니라 남과 북에 있는 모든 자녀의 수를 파악하였다. <표 11>에 나타난 결과에 의하면, 2012년에는 47.3%, 2013년에는 56.4%의 응답자들은 1명 내지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또한 2012년과 2013년 조사에서 이혼 혹은 사별에 의한 편부모 가구 수는 각기 12가구이다.

<표 11> 자녀의 수에 따른 응답자 분포 단위: 명(%)

자녀의 수	조사년도	
	2012	2013
0명	31(24.4)	51(38.4)
1명	35(27.6)	42(31.6)
2명	25(19.7)	33(24.8)
3명	9(7.1)	6(4.5)
4명	2(1.6)	1(0.8)
무응답	25(19.7)	—
합계 (N)	127(100)	133(100)

4. 조사 의의와 시사점

이 조사는 북한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조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근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북한에 거주할 당시 북한주민들의 삶과 북한 사회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013년까지 북한사회변동 조사연구는 2회에 걸쳐 이뤄졌다. 앞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조사를 진행하여서 시계열적 자료를 축적하고 변화와 지속성을 찾기 위한 자료를 제공하여, 북한사회에 대한 이해와 남북한 통합을 위한 학술연구 및 정책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을 통하여 북한을 이해한다는 것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우선 북한이탈주민들의 고향이 국경지역의 일부 지

역으로 국한되기 때문에 설문조사의 결과를 해석하는 데도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이 조사를 통하여 도출한 결과가 북한주민 전체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외부로부터 정보를 접하기 용이하고 국경을 건너기 수월한 지역의 주민들일수록 국내외적 환경변화에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행동양식은 다른 지역의 북한주민들과 다를 수 있다. 비록 통계적으로 엄밀하게 분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이 조사를 통하여 연구팀은 제한적 연구 환경 속에서도 최근의 탈북자들과 북한사회의 변화와 북한주민들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엄밀하게 계량화한 방법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삶과 의식을 연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연구의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설문문항에 대한 이해도에 대한 타당성 검증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 시장에서의 경제활동 및 금융 개념에 대해서는 응답자들이 문항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여지가 있다. 개념과 실제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조사의 오류는 사전조사와 사후평가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본 조사 역시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조사를 통하여 응답자들의 문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조사 완료 후 조사결과를 분석한 후 문항에 대한 타당도 검사를 다시 수행하였다.

둘째, 응답자들이 조사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사환경에 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응답자들은 남한사회에 정착하는 초기 단계를 경험하고 있는 만큼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하는 것에 주저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 경제적 혹은 정치적인 측면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을 꺼린다면 문항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모든 문항에 대답을 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도 응답자와 공유할 필요가 있다. 본 조사 역시 조사 과정에서 응답자들이 문항의 의도를 질문하는 사례를 경험하였다. 본 연구는 객관적인 자료의 축적과 그에 대한 분석이 목적이기 때문에, 문항에 등장하는 개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설명은 제공하였지만, 문항의 의도와 관련된 응답자들의 질문에는 응답하지 않고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셋째, 제한적인 표본표집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본 조사 및 연구를 지속한다면 축적된 자료는 북한사회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즉 사회의 변화 혹은 변동을 이해하는 것은 관찰대상에 대한 시계열적 분석에 기반하여야 한다. 또한 사회변동에 대한 예측은 관찰대상이 되는 사회 내부에서 현장참여연구를 통하여 사회구성원들의 관계맺기 혹은 행동방식의 변화를 바탕으로 이뤄질 수도 있다. 그런데 북한 사회의 경우 한국의 연구자들에게 현장연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비록 제한적이지만 북한이탈주민들을 통해서 북한사회와 북한주민의 삶의 양식에 대한 기초자료들을 축적해야 할 중요성이 커진다.

이 사회변동조사도 이제 두 차례 진행하였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 기대한다. 본 조사에서 제시한 설문조사와 결과들은 계량적 연구와 추세연구가 가능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들이 북한사회변동에 대한 심층분석의 토대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제2장

**의식주 생활의
불평등**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제2장 의식주 생활의 불평등

1. 사회적 기초로서의 일상

기존의 많은 북한연구는 권력구조의 변화, 엘리트의 변동, 노선 및 정책의 변화 등과 같이 상부구조나 거시구조의 변화에 주로 분석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연구경향에 대한 비판적 또는 대안적 접근으로서 최근에는 북한의 일상생활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대두하고 있다. 개인 차원에서 또는 기층 사회에서 지속되는 일상은 훨씬 더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구조 및 행위와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일상생활 연구는 사회 전체에 대한 평가와 개념화를 함축하고 있다.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가 말했듯이 일상을 다루는 것은 결국 일상성을 생산하는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사회의 성격을 규정짓는 것이다.⁶ 따라서 우리는 일상성을 하나의 개념으로만이 아닌 '사회'를 알기 위한 실마리로 간주할 수 있다.

북한 사회변동에 대한 연구는 사회의 기초로서 일상, 특히 의식주 생활에 대한 분석을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 의식주는 한 사회의 삶의 수

준을 가장 간단하게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다. 또한 개인이 영위하는 의식주 생활의 수준은 그 사회에서 개인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들(정치, 경제, 사회적 자원을 포함)이 결합한 복합체로서 그 개인이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한 사회의 의식주 생활의 불평등은 보다 더 거대한 사회경제적 구조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북한주민의 의식주 생활에서 나타나는 차이 역시 북한사회 전반의 불평등 구조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사회주의적 요소와 시장 경제적 요소가 공존하고 있는 북한사회에서 한 개인의 의식주 생활은 공식적인 제도와 규범의 영역을 넘어 비공식적인 제도와 규범의 영역을 포괄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 주민의 의식주 생활에 대한 이해는 시장화, 소득 및 계층의 분화, 부패구조, 사유화 등과 같은 사회구조 전반의 변화에 대한 통찰력을 요구한다.

이 장에서는 2012년~2013년 조사에 나타난 북한주민의 의식주 생활의 변화를 분석한다. 앞장에서 설명한 대로 조사표본의 특징상 설문지의 측정 시점은 조사의 시점보다 1년이 앞선다. 다시 말해서 2012년과 2013년에 실시된 두 차례의 설문조사를 통해 2011년과 2012년의 북한주민의 의식주 생활이 측정되었다. 북한주민의 의식주 생활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은 하루식사 횟수, 주식의 구성(입쌀과 강냉이의 비율), 고기의 섭취 횟수, 의류 원산지, 의류 획득 경로, 살림집(주거시설) 형태, 살림집 장만 경로, 살림집 개조 희망사항, 지역별 생활수준 비교, 가계소득의 주요 지출 내역 등이 포함된다. 구체적인 설문내용은 이 책의 부록에 첨부된 설문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글의 구성은 전반부에서 의식주 생활과 관련된 각각의 설문문항의

6_ 앙리 르페브르 지음, 박정자 옮김, 『현대세계의 일상성』(기파랑, 2005), p.84.

응답결과에 대한 기초적인 빈도분석의 결과가 기술되고, 후반부에서는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 변수와 각 설문문항과의 교차분석 또는 의식주 생활 관련 설문문항간의 교차분석의 결과가 기술된다. 마지막으로 이 글에서는 분석내용의 기술이 의식주가 아닌 식의주 순서로 되어있다. 그것은 북한당국의 정책적 연유로 인해 북한주민에게는 의식주보다는 식의주라는 용어가 더 익숙하기 때문에 설문지 구성뿐만 아니라 결과분석의 순서도 식의주 순서로 배열하였다.⁷

2. 식의주 실태와 지역별 생활수준 불균등

1) 식생활

한 사회의 생활수준을 평가할 때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은 식생활의 수준일 것이다. 북한 당국 역시 먹는 문제 해결을 경제 분야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한 많은 실증적 연구를

7_ 북한에서 의식주를 식의주로 바꿔 부르기 시작한 것은 1984년경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김일성은 먹는 문제가 입는 문제에 우선함을 지적하며 의식주 대신 식의주 용어를 사용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한다. 실제로 김일성이 인민들에게 제시했던 자상낙원으로서 북한의 미래 모습은 '이밥에 고깃국을 먹으며 비단옷을 입고 기와집에 사는 것'으로 식의주 순서였다. 하지만 북한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당력사 연구소가 2005년에 발간한 문헌에 의하면 2002년 9월 28일 김정일이 기존의 식의주 용어를 다시 의식주로 고쳐 부르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서재영 외, 『우리 당의 선군시대 경제사상해설』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5), p.186. 참고. 하지만 많은 탈북자들과의 면접을 통해 확인한 바 북한주민들의 삶에서 여전히 입는 문제보다는 먹는 문제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어 설문지 구성에서도 먹는 문제를 입는 문제보다 앞서 배치하였다.

통해 식생활은 수많은 인류 사회에서 계급 또는 계층을 구분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알려져 있다. 넬슨(Nelson, 1993)은 계급에 기초하여 음식물 변화에 관한 유용한 사례연구를 한 바 있다.⁸ 그의 분석에 의하면, 19세기 후반기에 영국에서 저소득층의 음식물들은 칼로리, 단백질, 지방, 비타민 A와 C는 낮은 반면, 탄수화물과 섬유질은 높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중상층의 음식물은 계란, 생선, 육류, 설탕, 지방이 많이 들어 있었고, 칼슘과 비타민이 풍부했다.⁹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20세기에는 실질소득의 상승과 국가의 복지정책으로 인해 계급 간의 음식섭취 격차는 크게 줄어들어 수렴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프랑스 사회학자 부르디외 역시 사회계급들 사이의 음식물 차이에 그들의 경제적·문화적 불평등이 반영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부르디외의 대표적인 저서 『구별짓기』에서는 취향과 교양의 선호 형태에서 나타나는 음식물의 차이가 사회적 위계의 각 층 간의 구별을 유지하는 매개수단으로 제시되고 있다.¹⁰

이상에서 언급된 서구자본주의 사회에서 관찰되는 계급 또는 계층

8_ Nelson, M, "Social-class trends in British diet, 1860~1980", in Catherine Geissler and Derek J. Oddy(eds.) *Food, Diet and Economic Change Past and Present* (Leicester: Leicester Press, 1993)

9_ 앨런 비어즈워스·테레사 케일, 『메뉴의 사회학: 음식과 먹기 연구로의 초대』 (한울아카데미, 2010), p.155. 재인용.

10_ 구체적으로, 전문직과 고위관리같이 높은 지위에 있는 개인의 음식 취향은 양이 적은 것, 세련된 것, 부드러운 것을 찾는 경향이 있고, 서민적 노동계급 취향은 양이 많은 것, 기름진 것, 거친 것을 좋아하며, 중상층 계급은 점점 더 날씬함과 세련된 먹기를 강조하고, 중간 계급은 이국적인 외국음식에 대한 취향을 개발하여 독특성을 유지하며, 대조적으로 노동계급 성원은 식도락을 크게 강조하고 소득의 상당 부분을 음식에 지출하고 많은 양의 빵과 돼지고기, 우유, 치즈 같은 기름진 음식을 소비하는 경향이 있다. 삐에르 부르디외,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새물결, 2006), pp.327~331.

간 식생활의 차이가 북한사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배급제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던 시기에 북한주민의 식생활은 특권층을 제외한 일반적인 가구에서 먹는 수준은 거의 동질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배급제가 중단되고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북한사회에서도 경제적 지위에 따라 식생활의 차이가 점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1) 하루 식사 횟수

“귀하는 북한을 나오기 직전에 하루 몇 끼를 식사했습니까?”를 질문한 결과, “하루 세끼”를 먹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2년 조사에서 75.4%, 2013년 조사에서 81.2%로 나타나 1년 사이에 하루에 세끼를 먹은 응답자의 비율이 5.8% 증가하였다. 반면에 “하루 두 끼”를 먹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2년 16.4%에서 2013년 12%로 줄었다. 또한 “한 끼도 못 먹을 때가 많았다”고 응답한 비율 역시 2012년 3.3%에서 2013년 0%로 줄었다.

이렇게 2012년 조사보다 2013년 조사에서 북한주민의 하루 식사 빈도가 늘어난 데는 북한의 곡물생산량의 증가를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세계 식량농업기구(FAO)의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2012년 475만 톤에서 2013년 503만 톤으로 전년대비 5.9%가 증가하였다.¹¹ 흥미롭게도 조사대상자들이 북한에 거주할 당시인 2011년과 2012년 사이에 증가한 곡물생산량의 비율과 같은 기간 북한주민의 하루 식사

11_ FAO, Special Report: FAO/WFP Crop and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 to the DPRK, 28 November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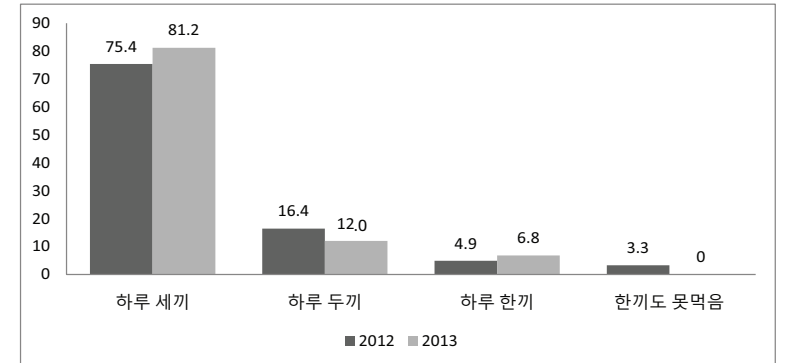
횟수가 증가한 비율이 거의 일치한다.

또한 예상과 달리 조사에서 북한주민의 식생활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두 가지 점을 시사한다. 하나는 최근 남한에 들어오는 탈북자들의 탈북동기 중에서 생계유지 또는 생존 목적인 경우의 비중이 크지 않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이들이 북한에 거주할 당시인 2011년과 2012년 해당 기간에 북한사회의 식량사정이 매우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는 점이다.

〈표 12〉 하루 식사 횟수 단위: 명(%)

식사 횟수 \ 연도	2012년	2013년
하루 세끼	92(75.4)	108(81.2)
하루 두끼	20(16.4)	16(12.0)
하루 한끼	6(4.9)	9(6.8)
한 끼도 못 먹음	4(3.3)	0(0.0)
합계	122(100.0)	133(100.0)

〈그림 1〉 하루 식사 횟수 단위: %



(2) 주식의 구성

북한주민의 식생활 수준을 평가하는데 하루 식사 횟수도 중요하지
만 식사의 질 문제를 평가하는 것은 북한주민의 삶의 질 수준뿐만 아니
라 북한사회의 변동을 측정하는 데 중요한 지표이다. “귀하는 북한을 나
오기 직전에 식사를 할 때 입쌀과 강냉이를 어떤 비율로 섞어 드셨습니
까”를 질문한 결과, “거의 입쌀”로 먹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2년
35.7%에서 2013년 36.8%로 소폭 증가하였다. 또한 “입쌀과 강냉이를 반
반 섞어 먹었다”고 응답한 비율 역시 2012년 24.6%에서 2013년 25.6%
로 증가하였다. “입쌀과 강냉이를 3:7로 섞어 먹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2년 13.5%에서 2013년 15%로 소폭 증가하였다. 반면에 “거의 강냉
이로만 먹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2년에 26.2%에서 2013년 22.6%로
눈에 띄게 줄었다.

1년 사이에 북한주민의 식생활은 하루 세끼를 먹는 횟수는 눈에 띄
게 늘었지만 여전히 쌀밥만 먹을 수 있는 사람은 10명 중 3~4명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5명은 쌀과 강냉이를 섞어 먹어야 하고, 여전히 10명 중
2명은 강냉이만으로 지어진 밥을 먹고 있는 등 식사의 질은 크게 향상되
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흥미로운 점은 식사횟수 문항과 주식의 구성 문항을 교차분석해
본 결과¹², 하루에 “한 끼도 못 먹을 때가 많았다”고 응답한 4명은 모두
“거의 강냉이로만 먹었다”고 응답하였고, 반면에 “거의 입쌀로만 먹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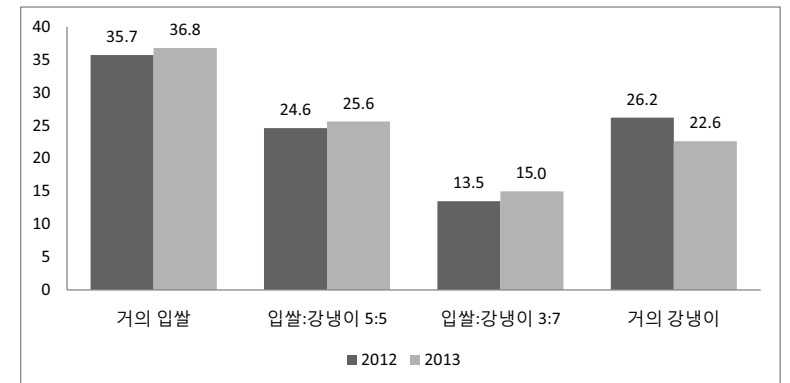
12. 이 글에서 제시되고 있는 교차분석은 2012년과 2013년에 실시된 두 차례의 설문조사 표본을 합친 데
이터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음을 밝힌다.

고 응답한 45명 중에서 42명은 “하루 세끼를 먹었다”고 응답하여 식사횟
수와 주식의 구성 간에 상당한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3〉 주식의 구성 단위: 명(%)

곡물 비율 \ 연도	2012년	2013년
거의 입쌀	45(35.7)	49(36.8)
입쌀과 강냉이 5:5	31(24.6)	34(25.6)
입쌀과 강냉이 3:7	17(13.5)	20(15.0)
거의 강냉이	33(26.2)	30(22.6)
합계	126(100.0)	133(100.0)

〈그림 2〉 주식의 구성 단위: %



(3) 고기의 섭취 횟수

식생활 수준을 평가하는데 주식의 구성성분 못지않게 결정적인 요
소는 바로 단백질 섭취량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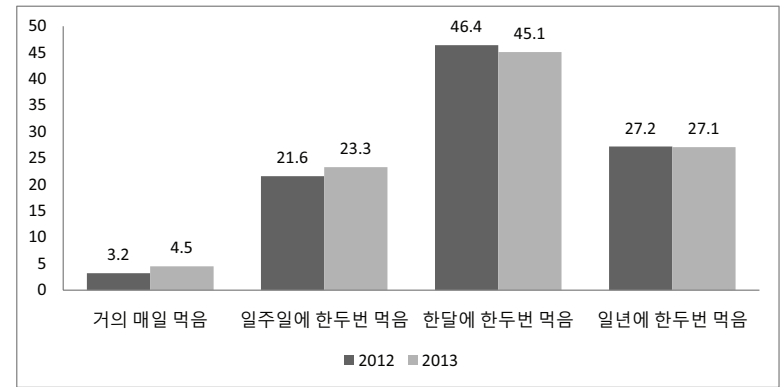
로리의 급원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에 대해 인구집단의 평균적인 섭취수준을 각각 총칼로리의 55~77%, 10~15%, 15~30%의 범위가 바람직하다고 권장하고 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자료에 따르면, 1986~1988년 동안 선진국에서는 평균적으로 각 개인은 일일 칼로리의 30.8%를 동물성 식품에서 섭취하고, 고기에서만 13.1%를 섭취한다. 반면, 개발도상국에서는 이 수치가 각각 8.9%와 4.3%밖에 안 된다. 실제로 일인당 국내총생산(GDP)과 일인당 일일 축산제품의 칼로리 소비량 사이에는 일관된 정(正)의 상관관계가 있다. 요컨대, 고기 섭취는 부(富)와 분명하게 연관되어 있다.¹³

이연숙의 연구에 따르면, 북한인구의 과반수가 탄수화물의 섭취비율은 기준보다 초과하고, 반면에 단백질과 지방은 기준보다 적다.¹⁴ 본 조사의 결과를 통해서도 북한주민의 단백질 섭취, 특히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은 매우 부족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4>에 나타나듯, 고기(육고기와 물고기 포함)를 “거의 매일 먹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2년에 3.2%, 2013년에 4.5%에 불과하였다. 반면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먹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2년 46.4%, 2013년 45.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일 년에 한두 번 정도 먹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2년 27.2%, 2013년 27.1%로 뒤를 이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먹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2년 21.6%에서 2013년 23.3%로 나타났다. 이상의 두 차례의 조사결과를 보면, 북한주민의 고기 섭취량은 여전히 부족하지만 점점 섭취량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거의 매일 또는 일주일에 한두 번 고기를 먹었다는 응답률이 1년 사이에 소폭 증가하였다.

<표 14> 고기 섭취 횟수 단위: 명(%)

섭취 횟수 \ 연도	2012년	2013년
거의 매일 먹음	4(3.2)	6(4.5)
일주일에 한두 번 먹음	27(21.6)	31(23.3)
한 달에 한두 번 먹음	58(46.4)	60(45.1)
일 년에 한두 번 먹음	34(27.2)	36(27.1)
먹어본 적 없음	2(1.6)	0(0.0)
합계	125(100.0)	133(100.0)

<그림 3> 고기 섭취 횟수 단위: %



식사횟수와 고기섭취 횟수를 교차분석해 본 결과, 고기를 거의 매일 먹거나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먹었다고 응답한 경우에 하루 세끼를 먹은 비율이 각각 80%, 96.6%에 달하였고, 반면에 하루에 한 끼도 먹기 힘

13_ 앨런 비어즈워스·테레사 케일, 『메뉴의 사회학: 음식과 먹기 연구로의 초대』, p.343.

14_ 이연숙 외, 『통일한국의 어린이 영양』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p.27.

들었다고 응답한 사람 4명은 모두 고기를 일 년에 한두 번 먹었다고 응답했다. 또한 주식의 구성비율과 고기섭취 횟수를 교차분석해 본 결과, 고기를 매일 먹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모두 주식을 거의 입쌀로만 먹었다고 응답했고, 고기를 일주일에 한두 번 먹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주식을 거의 입쌀로만 먹었다는 비율이 72.4%로 나타났다. 반면에 쌀과 강냉이를 3:7로 먹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경우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고기를 먹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56.8%로 가장 많았고, 거의 강냉이로만 먹었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일 년에 한두 번 정도 고기를 먹었다고 응답한 비중이 68.3%로 가장 많았다.

위에서 분석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북한주민의 식생활은 양적 개선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질적 향상은 상대적으로 느리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주식 구성에서도 쌀의 부족으로 여전히 대다수의 북한주민은 강냉이가 섞인 밥을 먹고 있다. 마지막으로 고(高) 탄수화물, 저(低) 단백질 위주의 식생활 구조의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2) 의생활

배급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용되던 시기에 식량뿐만 아니라 의복도 배급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배급제도가 붕괴된 이후 식량보다 의복은 더 철저하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품목이 되었다. 의류의 구매횟수나 의류의 주요 원산지와 구매처 등을 파악하는 것은 북한주민의 의생활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사회의 변화(특히, 계층분화, 유통시장의 구조 등)를 추적하는 데 유용한 지표이다.

(1) 의류의 구매 횟수

먼저 “귀하는 북한을 나오기 직전에 옷을 얼마나 자주 사 입었습니까” 질문에 “계절마다 한두 벌 정도 사 입었다”는 2012년 32.5%에서 2013년 36.8%로 4.3%가 증가하였다. “일 년에 한두 벌 정도 사 입었다”는 응답비율 역시 2012년에 34.9%에서 2013년에 43.6%로 일년 사이에 8.7%나 증가하였다. 반면에 “몇 년에 한두 벌 정도 사 입었다”는 응답률은 2012년에 23.8%에서 2013년 16.5%로 크게 감소하였다. 또한 “직접 사 입지 못하고 남이 입던 옷을 얻어 입었다”고 응답한 비율도 2012년 6.3%에서 2013년 2.3%로 줄어들어 의생활에서의 극빈층이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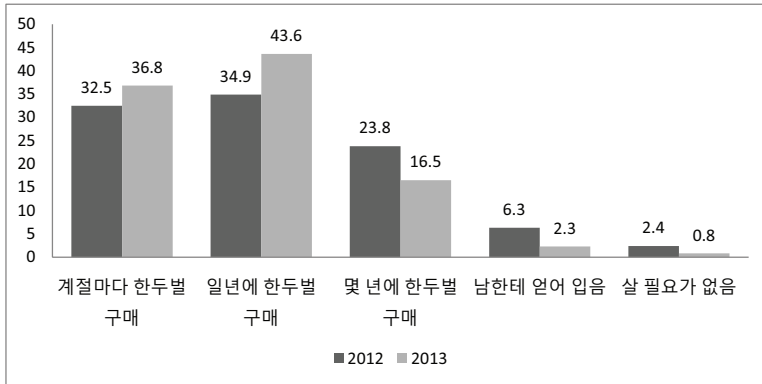
〈표 15〉 의류 구매 횟수

단위: 명(%)

구매 횟수 \ 연도	2012년	2013년
계절마다 한두 벌 구매	41(32.5)	49(36.8)
일 년에 한두 벌 구매	44(34.9)	58(43.6)
몇 년에 한두 벌 구매	30(23.8)	22(16.5)
남한테 얻어 입음	8(6.3)	3(2.3)
살 필요가 없음	3(2.4)	1(0.8)
합계	126(100.0)	133(100.0)

〈그림 4〉 의류 구매 횟수

단위: %



그렇다면 계절마다 한두 벌씩이라도 옷을 구매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일까. 위에서 살펴본 식생활 수준과 의류 구매횟수를 교차분석해 본 결과, 계절마다 한두 벌 정도의 옷을 사 입었다고 응답한 경우에 하루 세끼를 먹었다는 응답률은 85.6%, 주식을 거의 입쌀로만 먹었다는 응답률은 61.1%, 그리고 고기를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먹었다는 응답률이 51.7%로 나타났다. 반면에 일 년에 한 두벌 정도의 옷을 사 입었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하루 세끼를 먹었다는 응답률은 84.3%, 주식을 거의 입쌀로만 먹었다는 응답률은 33.3%, 그리고 고기를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먹었다는 응답률이 9.8%로 큰 변동이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의류를 자주 구매할 수 있는 주민과 그렇지 못하는 주민의 경우의 식생활을 비교했을 때 식사 횟수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주식의 구성과 고기 섭취 횟수에서 크게 격차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교차분석 결과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하루에 한 끼 정도밖에 먹지 못했다고 응답한 15명 중에서 계절마다 한 두벌 정도 옷을 사 입

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7명이나 되었다. 상식적으로 하루 한 끼 정도밖에 먹지 못하는 사람이 왜 옷을 자주 사 입을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심층면접을 통해 어느 정도 의문을 해결할 수 있다. 일부 북한 주민들에게 옷은 일종의 계급 위장의 수단으로 여겨진다. 다시 말해서, 먹는 수준은 바깥으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 옷에서는 빈부의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일부러 가난한 티를 내지 않기 위해서 먹는 것보다 입을 것에 더 신경을 쓰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사회와 마찬가지로 북한사회에서도 사회관계에서 체면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으며, 옷은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체면을 드러내는 문화적 상징으로 간주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2) 의류의 원산지

1990년대 중반 이후 배급제가 중단되고 소비재를 생산하는 경공업의 심각한 침체로 인해 북한사회에서 거의 대부분의 소비재의 구입은 기존의 국영상점에서 시장으로 대체되었다. 또한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상품의 대부분은 국내산보다는 중국, 러시아, 일본, 남한 등 국외산이 차지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핵 개발로 인해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장기화되면서 북한의 대외무역은 중국의존도가 매우 높다.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북한통계에 의하면, 2012년도 북한의 국가별 교역비중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무려 88.3%에 이른다. 이러한 북한의 대외무역구조는 국내 소비재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본 조사의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로 입는 옷의 원산지를 묻는 질문에 “중국산”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2012년에 87.7%, 2013년에 92.5%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

다. 반면에 “북한산”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2년 7%, 2013년 3%로 오히려 국내산의 비중은 크게 줄어들었다. 이 결과는 북한당국이 매년 신년사에서 경공업의 발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음을 시사한다. 특히 원자재와 전력의 만성적 부족으로 인해 북한의 소비재 산업의 회복은 향후에도 쉬워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북한주민의 의생활에서 중국산이 차지하는 절대적 비중은 앞으로도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남한산”의 경우 2012년 2.6%에서 2013년 1.5%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 영역에서 한류의 영향이 상당한 것과 대조적으로 경제 영역에서 남한산의 비중은 매우 저조하다.¹⁵ 이것은 북한당국이 시장에서 남한 상품의 유통을 불허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2010년 남한정부의 5.24조치로 인해 남북교역이 중단된 데 따른 영향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표 16〉 의류의 원산지 단위: 명(%)

원산지 \ 연도	2012년	2013년
북한산	8(7.0)	4(3.0)
중국산	100(87.7)	123(92.5)
남한산	3(2.6)	2(1.5)
일본산	3(2.6)	3(2.3)
합계	114(100.0)	133(100.0)

〈그림 5〉 의류의 원산지

단위: %



(3) 의류의 구입 경로

마지막으로, 북한주민들이 의류를 대체로 어떤 경로를 통해 구입하는지 살펴보았다. 위에서 의류의 원산지가 대부분 중국산이라고 응답했던 결과를 통해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귀하가 주로 입는 옷은 어디에서 구입했습니까?”라고 질문했을 때 2012년에는 91.9%, 2013년에는 94.7%가 시장(또는 장마당)에서 구매했다고 응답했다. 이 수치는 북한주민의 일상생활에서 시장 의존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반면에 국영상점에서 구입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2년 연속 모두 1명에 그

15.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조사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북한에 거주할 당시 남한 방송, 영화, 드라마 노래(음악)를 접해본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접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1년 90%, 2012년 88%로 대다수의 북한주민이 남한의 문화를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은미 외, 『김정은 1년, 북한주민의 의식과 사회변동: 2013 북한이탈주민의 의식 및 사회변동 조사』(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3), p.62.

쳤다. 이 결과는 북한의 국영상점을 통한 유통망의 완전한 붕괴를 시사한다. 이상에서 설명한 의류의 구입경로에 대한 응답 결과는 북한에서 경공업품의 유통이 과거에는 주문제를 기반으로 한 국영상점체제가 지배적이었던다면 이제는 북한주민의 소비재의 공급과 수요가 거의 시장경제체제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표 17〉 의류의 구입경로 단위: 명(%)

구매처 \ 연도	2012년	2013년
시장(또는 장마당)	113(91.9)	126(94.7)
국영상점	1(0.8)	1(0.8)
백화점	1(0.8)	0(0.0)
외국에서 직접 구입	8(6.5)	6(4.5)
합계	123(100.0)	133(100.0)

〈그림 6〉 의류의 구입경로 단위: %



3) 주거생활

북한에서는 주거단위 또는 주택을 ‘살림집’이라고 부른다. 북한 주택의 규모와 구조는 입주자의 직장과 직위를 기준으로 1~4호, 특호 등 모두 5개의 유형으로 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⁶ 북한주민의 주택 보급률은 일반적으로 50~6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택을 신청하고 ‘입사증’을 받기까지 4~5년이 걸리며 최근에는 10년을 기다려도 주택을 배정받기 힘들다고 한다.¹⁷ 따라서 하나의 주택에 여러 세대(가구)가 함께 동거하는 경우가 비교적 흔한 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2008년 북한 인구센서스 보고서에 의하면, 총 가구수는 약 588.7만이며 주택에 살고 있는 가구수 역시 약 588.7만으로 동일해 북한의 주택보급률이 100%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 보고서에 의하면, 전체 가구 중 원거가구는 99%에 이르고, 동거가구는 1%에 불과하다.¹⁸ 따라서 탈북자들을 통해서 알려져 있는 북한의 주거생활 실태와 유엔에 보고한 북한의 인구센서스 보고서의 내용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6_ 예를 들어, 1호는 방 1~2개와 부엌이 딸린 집단 공영주택 혹은 방 2개에 부엌과 창고가 딸린 농촌 문화주택으로 말단 노동자 및 사무원, 그리고 협동농장원에게 배정된다. 2호는 방 1~2개에 마루방과 부엌이 딸린 일반 아파트로 학교 교원이나 일반 노동자에게 배정된다. 3호는 기업소 부장, 중앙기관 지도원, 도 단위 부부장에게 배정되는데 방 2개에 부엌과 창고가 딸린 중급 단독주택이다. 4호는 중앙당과 장급, 내각 국장급, 대학교수, 기업소 지배인 등에 배정되는데 방 2개 이상에 목욕탕, 수세식 변소, 냉온방, 배란다 시설이 딸린 아파트이다. 마지막으로 특호는 독립식 다층 주택으로 정원, 수세식 변소, 냉온방 시설이 갖춰진 고급주택으로 중앙당 부부장 이상, 내각 부상 이상, 인민군 소장급 이상이 배정 받는다. 이상에서 설명한 북한의 주택유형과 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통일부 통일교육원, 『북한 이해 2010』(2010), p.233.을 참조할 것.

17_ 위의 책, p.233.

18_ 김두섭 외, 『북한 인구와 인구센서스』(대전: 통계청, 2011), p.234.

이 책에서는 북한주민의 주거생활을 살림집의 유형, 살림집의 장만 경로, 살림집의 개조희망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또한 여기서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2008년 북한 인구센서스 보고서의 내용도 활용하여 비교해볼 것이다. 살림집의 장만 경로는 북한의 사적 소유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데이터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살림집의 개조에 대한 희망사항을 통해서 북한주민의 주거시설의 인프라뿐만 아니라 문화적 욕구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1) 살림집의 유형

2008년 북한 인구센서스 보고서에 의하면, 주택유형은 크게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기타로 나뉜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유형은 연립주택으로 588만여 가구 중에서 약 258만 가구가 거주하여 43.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많은 것은 단독주택으로 약 198만 가구가 거주하며 33.8%를 차지하고 있다. 아파트의 경우는 약 126만 가구가 거주하며 21.4%를 차지하고 있다.¹⁹ 또 도시와 농촌의 주택유형을 비교해보면, 도시의 경우는 연립주택(49.5%), 아파트(32.5%), 단독주택(17.2%) 순서로 거주 가구수가 많으며, 농촌의 경우는 단독주택(59.4%), 연립주택(35.1%), 아파트(4.2%) 순서로 나타났다. 특히 아파트의 보급률이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났으며, 따라서 일반적인 현대사회와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도 아파트가 도시화의 상징적 주택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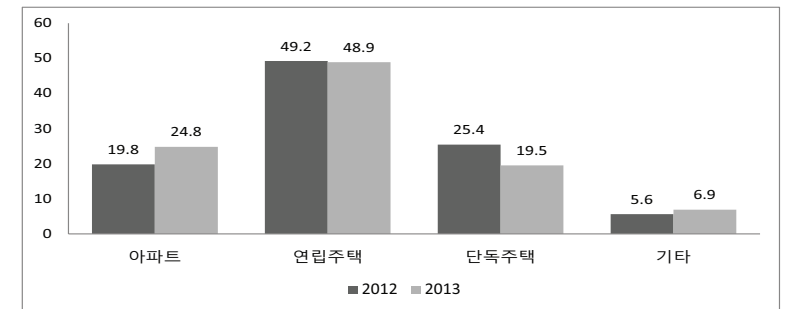
주택유형의 비중만을 놓고 비교해보면, <표 18>에서 보이듯 본 설문

조사에서 나타난 살림집 유형별 비중의 분포와 유엔에 보고된 2008년 북한 인구센서스 보고서의 내용이 크게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주목할 변화는 1년 사이에 아파트 거주자의 비율이 많이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북한에서 탈북직전 거주한 주택의 유형이 아파트라고 응답한 비율이 2012년에 19.8%에서 2013년 24.8%로 증가하였다. 연립주택의 경우는 2012년 49.2%에서 2013년 48.9%로 큰 변동이 없었다. 대신 단독주택의 경우 2012년 25.4%에서 2013년 19.5%로 크게 줄었다.

<표 18> 살림집 유형 단위: 명(%)

유형 \ 연도	2012년	2013년
아파트	25(19.8)	33(24.8)
연립주택(하모니카집)	62(49.2)	65(48.9)
단독주택(독집)	32(25.4)	26(19.5)
기타	7(5.6)	9(6.9)
합계	126(100.0)	133(100.0)

<그림 7> 살림집 유형 단위: %



¹⁹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of DPRK, DPRK Korea 2008 Population Census: National Report (Pyongyang, 2009), p.230.

(2) 살림집의 장만 경로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공식적으로는 일반 북한 주민들은 직장과 직위에 따라 주택을 국가로부터 배정받는다. 북한의 선전과 달리 실제 북한에서 주택난은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욱이 1990년대 중반 이후 심각한 경제침체로 인해 자재의 조달이 어려워 건설 분야는 크게 위축되었다. 따라서 기존과 같이 공식적으로 국가에 의한 주택 공급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대신에 민간 부문이 주택의 공급과 수요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1990년대 중반 이후 합법적이진 않지만 주택이 사고 팔리는 경제적 교환 대상이 되었다.

북한주민들이 주택을 어떤 경로로 장만하였는가를 파악하는 것 역시 북한사회의 변동을 추적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된다. 기존에 국유의 대상이었던 주택이 개인이 돈을 주고 사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것은 일반 시장경제체제에서와 같이 주택시장이 형성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특히 부동산시장의 존재 유무는 북한사회의 사적 소유제의 부활 여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이다.

조사 결과, <표 19>에서 보이듯 “국가에서 배정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2년 28.6%에서 2013년 14.3%로 절반이나 감소하였다. 반면에 “내가 돈을 주고 샀다”고 응답한 경우는 2012년 46.0%에서 2013년 66.9%로 크게 증가하였다. 국가에서 배정받은 집에서 사는 사람보다 돈을 주고 산 집에서 사는 사람이 3배 이상이 많은 것이다. “조상 또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다”는 응답률은 2012년 13.5%에서 2013년 9.8%로 감소하였고, “내가 직접 지었다”는 응답률도 2012년 10.3%에서 2013년 6.8%로 줄었다. 따라서 이 결과는 북한사회에서 이미 살림집이 개인과

개인 사이에 사고파는 상품으로 취급되고 있으며, 주택시장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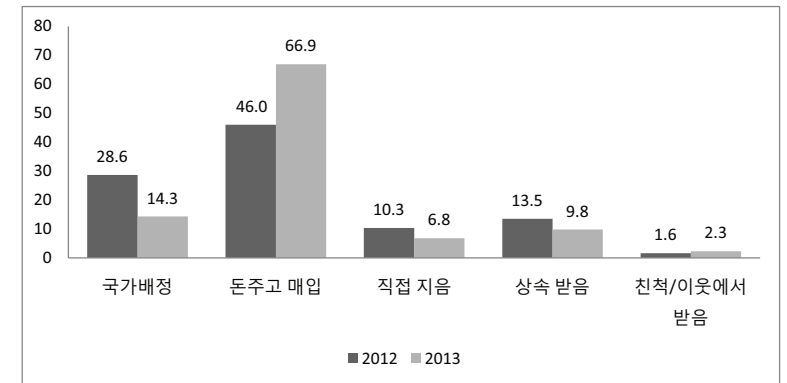
<표 19> 살림집 장만 경로

단위: 명(%)

장만 경로 \ 연도	2012년	2013년
국가에서 배정받음	36(28.6)	19(14.3)
내가 돈 주고 샀음	58(46.0)	89(66.9)
내가 직접 지었음	13(10.3)	9(6.8)
조상/부모로부터 물려받음	17(13.5)	13(9.8)
친척/주변사람한테 받음	2(1.6)	3(2.3)
합계	126(100.0)	133(100.0)

<그림 8> 살림집 장만 경로

단위: %



(3) 살림집 개조 희망사항

주거 생활의 수준을 평가하는데 주택유형보다는 상수도, 화장실, 난방, 취사 등과 같은 주택의 인프라 시설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유엔

에 보고된 2008년 북한인구센서스 보고서에는 상수도, 화장실 유형, 난방 및 취사 방식 등과 같은 주거의 인프라 시설에 대한 조사 결과도 포함되어 있다. 보고서에 나타난 전반적인 북한사회의 주거 인프라 시설은 낙후되었고 매우 열악한 상태이다.

센서스 보고서에 의하면, 집안에 개별 수도가 있는 비중은 85%에 달하나 실제로는 전력부족으로 인해 하루에 2~3시간 제한적으로 식수가 공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화장실 시설의 경우 보고서에 의하면 수세식 화장실 보급률은 59.4%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재래식 화장실 형태이다. 물론 평양시의 경우는 76.1%가 수세식 화장실을 갖추고 있으나, 농촌과 지방도시로 내려갈수록 더 낮아져 황해남도의 경우 55.1%만이 수세식 화장실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아무리 수세식 화장실 시설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전력부족으로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수세식 화장실의 이용률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난방 시설 역시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인구센서스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의 난방 방식은 석탄(연탄)과 목탄 난방이 각각 47.1%와 45.1%로 주축을 이루고 있다. 또한 취사 연료 역시 석탄이 46.1%, 나무땃감이 46.9%를 차지하고 있다.²⁰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북한주민의 주거생활의 인프라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며, 많은 북한주민들은 먹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게 되면 주거환경을 변경하고자 하는 욕구가 크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참여자들에게 “돈이 많이 있다면 제일 먼저 살림집의 무엇을 바꾸고 싶었습니까?”를 질문했다. 그 결과, 2012년과 2013년 응답률의 수치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위생실, 난방, 수도시설과

같이 인프라 시설과 관련된 문항보다는 “살림집의 크기나 방의 수를 늘리고 싶었다”와 “가구, 벽지, 장판 등 살림집 내부를 좋게 바꾸고 싶었다”의 문항 선택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인 것은 살림집의 크기나 방의 수를 늘리고 싶다는 것으로 두 차례의 조사에서 모두 34.5% 안팎으로 나타났다. 2008년 북한 인구센서스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대체로 주택의 규모가 작고 방의 수도 적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 규모의 비중이 15평 미만 17%, 15~22.4평 73.5%, 22.5~29.9평 7.6%, 30평 이상 1.9%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당 보유하고 있는 방의 수 역시 1개 17.2%, 2개 64.7%, 3개 17%, 4개 이상 1.1%로 나타났다.²¹ 따라서 본 조사에 참여한 많은 응답자들이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가장 먼저 개조하고 싶은 것이 집의 크기를 늘리거나 방의 수를 늘리고 싶다고 응답한 것은 타당하다.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항은 살림집의 인테리어를 바꾸겠다는 것으로 2012년에 32.8%, 2013년에 19.5%로 나타났다.

집의 크기나 방의 수를 늘리고 싶어하는 수요에는 사적 영역의 확보라는 욕구가 내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지표이다. 또한 탈북자 심층면접을 해보면, 북한사회에서 주택의 크기와 인테리어는 자신의 부(富) 또는 권력을 과시하는 문화적 상징물이기도 하다. 북한주민들이 집의 크기를 늘리거나 집안을 화려하게 꾸미기를 희망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은 그들에게 일종의 문화자본의 획득 욕구로서 ‘과시하기 위한’ 생활

20_ Ibid, pp.252~2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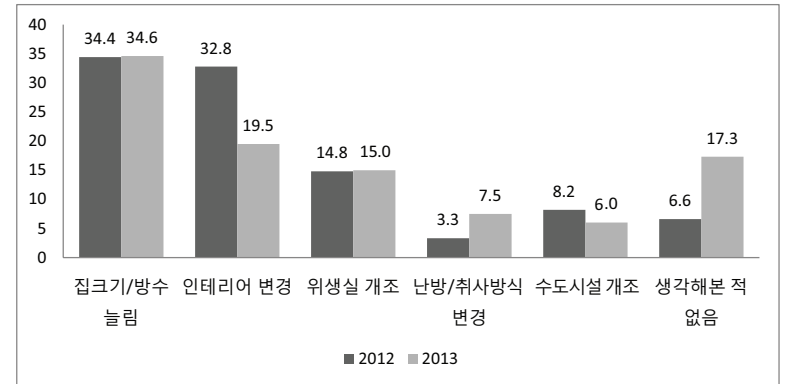
21_ Ibid, pp.238~251.

양식의 욕구가 있음을 시사한다. 프랑스 사회학자 삐에르 부르디외(P. Bourdieu)의 저명한 저서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에 의하면 이러한 과시적 문화자본의 획득 행위는 중간계급이나 민중계급 출신의 신흥 빈민 부르주아지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다.²² 실제로 비공식 가구총수입과 살림집 개조 희망사항을 교차분석해 본 결과, 가구의 월수입이 많을수록 집 크기 혹은 방의 수를 늘리거나 인테리어를 바꾸고 싶어하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문화자본의 획득 욕구의 형성은 시장을 통해 상당한 부(富)를 축적한 신흥 계층이 북한사회에서 등장하는 현상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표 20〉 살림집 개조 희망사항 단위: 명(%)

개조 사항	연도	2012년	2013년
집 크기나 방의 수를 늘림		42(34.4)	46(34.6)
인테리어 변경		40(32.8)	25(19.5)
위생실(화장실) 개조		18(14.8)	20(15.0)
난방/취사방식 변경		4(3.3)	10(7.5)
수도시설 개조		10(8.2)	8(6.0)
생각해본 적 없음		8(6.6)	23(17.3)
합계		122(100.0)	133(100.0)

〈그림 9〉 살림집 개조 희망사항 단위: %



4) 가계 소득의 주요 지출 내역

가계 소득의 지출 내역을 통해 북한주민의 소비생활의 패턴을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던 시기에는 북한주민의 소비생활이 비교적 균질적이었다면, 경제생활에서 시장의 비중이 커지면서 소득불평등이 심해지고 이에 따라 개개인의 소비생활 역시 빠르게 분화하고 있다. 북한주민의 가계 소득의 지출 내역은 그들의 소비생활의 패턴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북한사회의 구조를 분석하는 데 중요한 사회적 지표가 된다.

먼저 북한주민이 가계소득에서 가장 많이 지출한 부문은 두 차례의 조사 모두에서 '식의주 문제 해결'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에 나타나듯, 1순위 응답에서는 식의주 문제 해결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2012년에 75.2%, 2013년에 75.8%로 두 차례의 조사에서 거의 비슷한 수

22. 삐에르 부르디외, 최종철 옮김,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pp.156~157.

준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2순위 응답에서는 ‘장사 또는 사업 밀천’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2012년에 44.2%에서 2013년 38.9%로 소폭 감소하였다. 3순위의 경우에는 2012년 조사에서 자녀교육과 뇌물이 모두 21.8% 동률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에, 2013년 조사에서는 자녀교육이 22.7%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상의 소득지출의 응답결과는 북한주민 대부분이 가계소득의 대부분을 생계문제를 해결하는데 지출하고 있으면서도, 생계문제가 해결된 다음에는 자녀교육에 가장 많이 지출하고 있어 남한사회의 부모 못지 않게 북한사회의 부모들도 자식교육에 열성임을 보여준다. 또한 지출 내역 중 미래를 위해 저축을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매우 극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북한의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잦은 화폐개혁으로 원화에 대한 신뢰가 적어지면서 자산축적에 대한 동기부여가 약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의 가계소득이 생계유지, 자녀교육, 뇌물과 같이 현상적 문제해결을 위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자산을 축적할 기회나 가능성이 매우 낮음을 보여준다.

〈표 21〉 가계 소득의 주요 지출 내역

단위: %

연도	2012년	2013년
1순위	식민주 문제해결(75.2)	식민주 문제해결(75.8)
2순위	장사 또는 사업밀천(44.2)	장사 또는 사업밀천(38.9)
3순위	자녀 교육(21.8) 뇌물(21.8)	자녀교육(22.7)

5) 지역별 생활수준 비교

(1) 도(道)별 생활수준 비교

다음으로는 지역별로 북한주민의 생활수준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다만, 평양시의 특수성이 있어 질문지에서는 평양시를 제외하고 지역별 평가를 하도록 하였다. 지역별 평가는 도와 시 단위로 나누어 각각 이루어졌다. 먼저, 도별 생활수준 평가에서는 〈표 22〉에 나타나듯, 가장 잘 사는 도의 경우는 1순위가 2년 연속 “평안남도”로 2012년에 38.4%에서 2013년 41.4%로 소폭 증가하였다. 평안남도의 경우 평양시와 인접한 행정구역이며 동시에 공업과 농업이 균형적으로 발전한 행정구역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다음으로는 가장 잘 사는 도의 2순위로는 2년 연속 “함경북도”가 차지하였다. 함경북도는 중국과 러시아와 국경을 맞닿고 있어서 무역이 활성화되어 있고, 공업이 발달되어 있는 특징을 지닌다.

중간 정도 사는 도의 경우 1순위에 2년 연속 “양강도”가 선택되었다. 양강도는 중국과 접경지역이고 변경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특징을 지닌다. 마지막으로 가장 못사는 도의 경우 2년 연속 “강원도”가 1순위를 차지하였다. 2012년에는 전체 응답자의 40%, 2013년에는 43.2%가 강원도를 가장 못사는 도라고 응답했다. 강원도는 지리적으로 국경 및 수도와 매우 멀리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이 불편하여 인적 이동뿐만 아니라 물적 이동이 원활하지 않으며, 더욱이 군사분계선과 맞닿아 있는 연선지대이기 때문에 군사지역으로서 개발 제약은 받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리적 특성 때문에 경제적으로 생활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표 22〉 도별 생활수준 비교 단위: %

지역(도) 순위	연도	2012년	2013년
	가장 잘 사는 도	1순위	평안남도(38.4)
2순위		함경북도(28.6)	함경북도(23.3)
3순위		평안북도(12.5)	양강도(15.0)
중간 정도 사는 도	1순위	양강도(26.1)	양강도(24.1)
	2순위	함경북도(21.0)	함경북도(22.6)
	3순위	함경남도(10.9)	함경남도(12.8)
가장 못사는 도	1순위	강원도(40.0)	강원도(43.2)
	2순위	함경남도(13.0)	자강도(14.4)
	3순위	황해남도(11.3)	황해남도(12.9)

(2) 시(市)별 생활수준 비교²³

평양시를 제외한 시별 생활수준을 비교하는 질문에서는 〈표 23〉에 나타나듯이 가장 잘 사는 시의 경우 2년 연속 “라선시”가 1순위를 차지하였다. 2012년에는 전체 응답자의 37.1%가, 2013년에는 34.1%가 라선시가 가장 잘 사는 시라고 응답했다. 라선시는 북한에서 경제무역지대로서²⁴ 외부의 상품 및 자본의 유통이 매우 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북한주민들 사이에서도 돈과 물건이 가장 많은 도시로 인식되고 있다. 가장 잘 사는 시의 경우에는 “신의주시”가 2012년 29.3%, 2013년 27.3%로

23 설문지에 제시된 시들은 제한적이다. 북한에 있는 모든 시들을 설문지에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설문지에는 각 행정구역의 도 소재지 또는 특구 지역 등을 중심으로 제시되었다.

24 라선시는 1991년 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선포된 이후 2010년 1월 특별시로 지정되었다.

2년 연속 2순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평성시’는 2012년 13.8%, 2013년 14.4%로 가장 잘 사는 시의 3위를 차지하였다. 신의주와 평성시는 모두 시장이 발달된 도시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다음으로 중간 정도 사는 시의 경우, 2012년에는 라선(19.7%)>청진(18.9%)>신의주(15.6%) 순서로 나타났으며, 2013년에는 청진(22%)>평성(19.7%)>혜산(16.7%) 순서로 나타났다. 여기서 거론된 도시들은 모두 무역과 시장이 발달되어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또한 1순위에서 3순위까지의 응답률 격차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가장 못 사는 시의 경우는 “사리원시”가 2012년 30.3%, 2013년 26%로 2년 연속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사리원시는 설문지에서 제시한 유일한 농업중심지역의 도시를 대표한다. 따라서 북한주민들 사이에서는 공업 또는 상업이 발달된 도시에 비해 농업이 발달된 도시가 상대적으로 못 사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3〉 시별 생활수준 비교 단위: %

지역(시) 순위	연도	2012년	2013년
	가장 잘 사는 시	1순위	라선(37.1)
2순위		신의주(29.3)	신의주(27.3)
3순위		평성(13.8)	평성(14.4)
중간 정도 사는 시	1순위	라선(19.7)	청진(22.0)
	2순위	청진(18.9)	평성(19.7)
	3순위	신의주(15.6)	혜산(16.7)
가장 못사는 시	1순위	사리원(30.3)	사리원(26.0)
	2순위	원산(18.3)	개성(18.3)
	3순위	개성(14.7)	혜산(17.6)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북한사회의 지역별 생활수준을 비교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지역별 부(富)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2012년 조사에 비해 2013년 조사에서는 각 순위 간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시장이 발달하고, 자본과 상품의 유입이 많은 지역들에 부(富)가 집중되고 있다. 가장 잘 사는 시들로 꼽힌 라선, 신의주, 평성은 모두 북한에서 거대 물류시장의 기지로 알려져 있으며, 라선과 신의주는 무역이 발달하여 외부로부터의 인적 이동과 자본 및 상품의 유입이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셋째, 지역 불균형이 고착화되고 있다. 두 차례의 조사에서 나타난 가장 잘 사는 지역(도/시), 중간 정도 사는 지역(도/시), 가장 못사는 지역(도/시)의 순위가 큰 변동이 없었다는 것은 지역의 불균형 또는 지역별 빈부격차가 고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3. 소득수준별 식의주 생활의 불평등

1) 인구사회학적 배경변수와의 관계

이제까지는 북한주민의 식·의·주와 관련된 기초생활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하지만 이것은 각 문항별 응답이 도수분포표 상에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빈도분석에 불과하다. 위에서 기술한 식의주 생활은 인구사회학적 배경변수에 따라 분포의 특성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인구사회학적 문항과 식의주 문항 간의 교차분석을 실시하였

다. <표 24>에서 보이듯 교차분석에 사용된 인구사회학적 변수에는 성별, 연령, 북한에서의 거주지역/교육수준/직업, 그리고 주관적 계층의식이 포함된다. 그리고 식의주 문항에는 하루 식사 횟수, 주식의 구성, 고기 섭취 횟수, 의류 구매 횟수, 의류의 원산지, 의류 구매경로, 살림집의 유형, 살림집 장만 경로, 그리고 살림집 개조 희망사항이 포함된다.

교차분석은 명목 또는 서열 척도로 되어 있는 두 변수 간의 상호관련성(또는 독립성)을 분석할 때 사용하는 분석방법으로서, 카이제곱(χ^2) 검정을 흔히 이용한다. 카이제곱 검정 결과 유의미하게 나왔다는 것은 교차분석한 두 문항 간에 상호 관련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표 24>에서 *로 표시된 문항들은 카이제곱 검정 결과 유의확률(p 값)이 <0.05 또는 <0.01에 해당되는 것들이다. 즉, *로 표시된 문항들은 상호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24>에서 보이듯 교차분석한 결과 성, 연령, 거주지역²⁵, 교육수준과 식의주 문항과는 대체로 통계적 유의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직업, 계층과 식의주 문항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또한 2012년 조사보다는 2013년 조사의 교차분석에서 상호 관련성이 있는 항목들이 더 많이 늘어났다. 2012년에는 인구사회학적 항목과 식의주 항목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호관련성이 있는 경우가 12건이었다면, 2013년에는 두 항목 간 상호관련성이 있는 경우가 16건으로 나타났다. 2년 연속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성을 보

25. 거주지역 변수 경우는 표본에서 함경북도와 양강도의 편중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교차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인 항목은 연령과 의류구매 횟수, 거주지역과 의류 원산지, 직업과 의류 구매처, 계층과 주식구성/고기섭취 횟수/의류구매 횟수/살림집 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의주 문항들 가운데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상관성이 가장 자주 나타난 것은 의류 구매횟수와 살림집 유형이다. 이것은 북한사회에서 먹는 문제가 어느 정도는 해소되어 인구사회학적 변수 간 격차가 작은 반면에 의복이나 주거양식과 같은 항목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과시효과'를 갖고 있는 공통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직업이나 계층에 따라 격차가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4〉 인구사회학적 문항과 식의주 문항 교차분석 결과의 통계적 유의성 분포

단위: %

배경변수 의식주	성별		연령		거주 지역		교육 수준		직업		계층	
	2012	2013	2012	2013	2012	2013	2012	2013	2012	2013	2012	2013
하루 식사 횟수	-	-	-	-	-	*	-	-	-	-	*	-
주식구성	-	-	-	-	-	*	-	-	-	*	*	*
고기 섭취 횟수	-	-	-	*	-	-	-	-	-	-	*	*
의류구매 횟수	-	-	*	*	-	-	-	*	-	-	*	*
의류 원산지	-	-	-	-	*	*	-	-	-	*	-	-
의류 구매처	-	-	-	-	*	-	*	-	*	*	-	-
살림집 유형	-	-	-	-	*	-	-	*	-	*	*	*
살림집 장만 경로	-	-	-	-	-	-	-	-	-	-	*	-
살림집 개조 희망사항	-	-	-	*	-	-	-	-	-	-	-	-
소비지출 내역	-	-	-	*	-	*	-	*	-	-	-	-

* 표시: 카이제곱 검정 결과의 유의성

계층 변수의 경우 2012년 조사에서는 식의주 문항 총 9개 중에서 6개 문항(하루 식사 횟수, 주식 구성비율, 고기 섭취 횟수, 의류구매 횟수, 살림집 유형, 살림집 장만 경로)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성을 보였다. 다시 말해서, 이 결과는 북한사회에서 계층 분화에 따라 차별화된 삶의 양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2013년 조사에서는 주식구성, 고기섭취 횟수, 의류구매 횟수, 살림집 유형이 계층 변수와 상호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의 경우에는 계층뿐만 아니라 직업의 변수와 식의주 문항간에 상호관련성이 있는 경우가 많아졌다. 직업 변수의 경우 주식구성, 의류원산지, 의류구매처, 살림집 유형에서 상호관련성이 나타났다. 〈표 25〉에서 나타나듯이 직업별 주식구성을 비교해보면, 직업이 장사인 경우 입쌀로만 식사를 했다는 응답률이 61.1%로 가장 높아 다른 직업에 종사한 응답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족한 식생활을 누렸음을 알 수 있다. 군인, 사무원, 전문가의 경우 역시 거의 입쌀로만 식사한 응답률이 높은 그룹에 포함된다. 하지만 농민의 경우는 곡물을 직접 생산하는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강냉이로만 식사를 했다는 응답률이 100%로 나타나 실제로 북한사회에서 농민이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위치에 있음을 보여준다.

〈표 25〉 2013년 직업별 주식 구성 비교

단위: %

구분	노동자	농민	사무원	전문가	학생	군인	장사	가정 부인
거의 입쌀	28.6	0.0	38.5	36.4	37.5	50.0	61.1	30.4
입쌀 강냉이 5:5	33.3	0.0	23.1	27.3	0.0	16.7	16.7	30.4
입쌀 강냉이 3:7	21.4	0.0	15.4	18.2	25.0	33.3	5.6	8.7
거의 강냉이	16.7	100.0	23.1	18.2	37.5	0.0	16.7	30.4

2) 계층별 식의주 생활 비교

위에서는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식의주 문항 간의 교차분석의 통계적 유의미성 분포를 살펴보았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 항목들을 모두 다루는 대신에 여기서는 2012년과 2013년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많은 통계적 유의미성을 보인 계층 변수와 식의주 생활에 대한 교차분석의 결과를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주식구성, 고기섭취 횟수, 의류구매횟수, 살림집 유형과 계층과의 교차분석 결과가 2012년과 2013년 공통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성을 나타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네 가지의 항목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를 자세하게 다루고자 한다.

교차분석에서 사용한 계층은 응답자가 탈북 직전 시기에 자신이 속했던 계층을 주관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엄밀하게 말하면 '주관적인 계층 의식' 또는 '귀속적 계층'을 의미한다. 2012년 조사에서는 계층의 구성이 상층 8.9%, 중간층 50.8%, 하층 40.3%로 나타났으며, 2013년 조사에서는 상층 3.8%, 중간층 69.9%, 하층 26.3%로 나타났다. 두 차례 조사의 응답결과만 비교했을 때, 1년 사이에 상층과 하층은 각각 5.1%, 14%로 감소한 반면에, 중층에 속한다는 응답자의 수는 19.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단기간에 계층의 변동이 눈에 띄게 나타났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북한주민의 경제적 지위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소득격차에 따른 계층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1) 계층별 식생활 비교

계층별 주식의 구성을 비교해보면, <표 26>에서 보듯 전반적으로 상층의 경우 거의 입쌀로 밥을 먹었다는 응답률이 80% 이상을 선회한다. 반면에 중층의 경우 상층에 비해 거의 입쌀로 된 주식의 비중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고 대신 입쌀과 강냉이가 반반씩 섞인 밥을 먹었다는 응답률의 비중이 크게 늘어난다. 하층의 경우는 거의 강냉이로만 밥을 먹었다는 응답의 비중이 50% 가까이 차지한다.

그런데 2012년과 2013년 조사 결과를 비교해보면 흥미로운 변화가 발견된다. 상층과 하층의 경우에는 식생활의 질적 수준이 하향적인 반면에 중층의 경우 상향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층의 경우 거의 입쌀로 먹었다는 비율은 2012년 81.8%에서 2013년 80%로 큰 변동이 없으나 입쌀 강냉이를 반반씩 섞어 먹었다는 비율은 2012년 9.1%에서 2013년 20%로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에 중층의 경우는 거의 입쌀로 먹었다는 응답률이 2012년 41.3%에서 2013년 43%로 소폭 증가하였고, 입쌀과 강냉이를 반반씩 섞어 먹었다는 응답률은 2012년 33.3%에서 2013년 30.1%로 소폭 감소하여 식생활의 질이 조금씩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층의 경우 변화는 더욱 뚜렷하다. 거의 입쌀로 밥을 먹었다는 응답률이 2012년 20.4%에서 2013년 14.3%로 크게 줄었고, 입쌀과 강냉이를 반반씩 섞어 먹었다는 응답률 역시 2012년 16.3%에서 2013년 14.3%로 감소했다. 반면에 입쌀과 강냉이를 3:7로 섞어 먹었다는 응답률은 2012년 14.3%에서 2013년 22.8%로 크게 증가하였고, 거의 강냉이로 밥을 먹었다는 응답률은 거의 변동이 없는 채 50% 가까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계층 간 식생활의 질적 수준에서 양극

화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동시에 상층과 하층의 식생활 수준이 중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동이 심하다.

〈표 26〉 계층별 주식 구성 비교

단위: %

구분	상층		중층		하층	
	2012	2013	2012	2013	2012	2013
거의 입쌀	81.8	80.0	41.3	43.0	20.4	14.3
입쌀과 강냉이 5:5	9.1	20.0	33.3	30.1	16.3	14.3
입쌀과 강냉이 3:7	0.0	0.0	14.3	12.9	14.3	22.9
거의 강냉이	9.1	0.0	11.1	14.0	49.0	48.6

다음으로 계층별 고기섭취의 횟수를 비교해보면, 〈표 27〉에 나타나 듯 전반적으로 상층과 중층에서는 고기섭취의 양적 증가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으나, 하층의 경우는 오히려 고기 섭취율이 감소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층의 경우 거의 매일 고기를 먹었다는 응답률이 2012년 9.1%에서 2013년 20%로 크게 증가하였다. 중층의 경우는 거의 매일 고기를 먹었다는 비중이 2012년 4.8%, 2013년 4.3%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또한 일주일에 한두 번 고기를 먹었다는 응답률 역시 2012년 25.8%에서 2013년 29%로 소폭 상승하였다. 하층의 경우 고기를 거의 매일 먹었다거나 일주일에 한두 번 먹었다는 응답률은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증가한 반면에 한 달에 한두 번 고기를 먹었다는 응답률은 2012년 40.8%에서 2013년 28.6%로 크게 감소하였고, 일 년에 한두 번 고기를 먹었다는 응답률은 2012년 51%에서 2013년 62.9%로 크게 증가하여 오히려 1년 사이에 고기섭취의 양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 계층별 고기섭취 횟수 비교

단위: %

구분	상층		중층		하층	
	2012	2013	2012	2013	2012	2013
거의 매일	9.1	20.0	4.8	4.3	0.0	2.9
일주일에 한두 번	81.8	40.0	25.8	29.0	4.1	5.7
한 달에 한두 번	0.0	40.0	56.5	51.6	40.8	28.6
일 년에 한두 번	9.1	0.0	12.9	15.1	51.0	62.9
먹어본 적이 없음	0.0	0.0	0.0	0.0	4.1	0.0

(2) 계층별 의생활 비교

계층별 의류 구매횟수를 비교해보면, 〈표 28〉에서 보이듯 상층의 경우를 제외한 중층과 하층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의생활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층에서의 양적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층의 경우 계절마다 한두 벌의 옷을 사 입었다는 응답률이 2012년 90.9%에서 2013년 60%로 크게 줄었다. 반면에 일 년에 한두 벌의 옷을 사 입었다는 응답률은 2012년 0%에서 2013년 40%로 크게 늘어났다. 중층의 경우 계절마다 한두 벌의 옷을 사 입었다는 응답률이 2012년 38.1%에서 2013년 45.2%로 증가하였고, 일 년에 한두 벌의 옷을 사 입었다는 응답률 역시 2012년 39.7%에서 2013년 43%로 증가하였다. 하층의 경우는 계절마다 한두 벌의 옷을 사 입었다는 응답률은 미미한 수준에서 줄었지만 일 년에 한두 벌의 옷을 사 입었다는 응답률은 2012년 36.7%에서 2013년 45.7%로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반면에 몇 년에 한두 벌의 옷을 사 입었다는 응답률과 남의 옷을 얻어 입었다는 응답률은 줄어들었다.

〈표 28〉 계층별 의류 구매 횟수 단위: %

구분	상층		중층		하층	
	2012	2013	2012	2013	2012	2013
계절마다 한두 벌	90.9	60.0	38.1	45.2	12.2	11.4
일 년에 한두 벌	0.0	40.0	39.7	43.0	36.7	45.7
몇 년에 한두 벌	9.1	0.0	15.9	10.8	36.7	34.3
남의 옷을 얻어입음	0.0	0.0	1.6	1.1	14.3	5.7
구입할 필요없음	0.0	0.0	4.8	0.0	0.0	2.9

(3) 계층별 주거생활 비교

계층별로 살림집의 유형 역시 1년 사이에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났다. 〈표 29〉에 나타나듯 전반적으로 상층의 경우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대신에 단독주택의 비중이 늘어났고, 중층의 경우는 아파트의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하층의 경우는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비중이 감소하고 단독주택의 비중이 소폭 증가하였다.

상층의 경우 아파트에서 거주했다는 응답률이 2012년 27.3%에서 2013년 20%로 줄었고, 연립주택에서 살았다는 응답률은 2012년 18.2%에서 2013년 0%로 크게 감소했다. 대신에 단독주택에서 거주했다는 응답률은 2012년 54.5%에서 2013년 80%로 크게 늘어났다. 중층의 경우, 아파트에서 거주했다는 응답률이 2012년 17.5%에서 2013년 30.1%로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에 단독주택의 비중은 2012년 30.2%에서 2013년 16.1%로 크게 줄었다. 연립주택에서 거주했다는 응답률은 2012년 46%, 2013년 48.4%로 조금 늘어났지만 비슷한 비중을 유지하였다. 하층의 경우 아파트에서 거주했다는 응답률이 2012년 20%에서 2013년 11.4%로

줄어들었고, 연립주택의 비중 역시 2012년 62%에서 2013년 57.1%로 줄었다. 반면에 단독주택에 거주했다는 응답률은 2012년 12%에서 2013년 20%로 늘어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계층별 살림집 유형을 비교해보면, 우선 상층과 하층에서 공통적으로 단독주택의 비중이 늘어났지만 동질적인 변화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계층별로 살림집 유형과 살림집 장만 경로를 교차분석해본 결과, 상층의 경우는 단독주택을 내가 직접 지었다는 비중이 많은 반면에, 하층의 경우는 단독주택을 직접 지었다는 비중보다는 국가에서 배정받았다는 비중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상층의 경우 집단생활을 해야 하고 규모가 작은 아파트나 연립주택 대신에 사생활이 보장되고 개인의 수요와 취향에 맞춘 단독주택을 직접 짓는데 반해, 하층의 경우는 국가에서 배정받은 오래된 주택이거나 농촌지역에 있는 단독주택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흥미로운 것은 남한사회와 비슷하게 북한사회에서도 중층에 속하는 경우 주거양식으로서 아파트를 선호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표 29〉 계층별 살림집 유형 비교 단위: %

구분	상층		중층		하층	
	2012	2013	2012	2013	2012	2013
아파트	27.3	20.0	17.5	30.1	20.0	11.4
하모니카집(연립주택)	18.2	0.0	46.0	48.4	62.0	57.1
독집(단독주택)	54.5	80.0	30.2	16.1	12.0	20.0
기타	0.0	0.0	6.3	5.4	6.0	11.4

(4) 계층별 생활 구성요건

위에서 설명한 계층별 식의주 생활에 대한 교차분석을 종합하여 북한의 계층별 생활상을 재구성해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제시되는 응답률은 2012년과 2013년의 표본을 합친 255명을 대상으로 계층 변수와 의식주 관련 문항들 간의 교차분석을 하여 얻은 수치임을 밝혀둔다.

우선 상층의 생활은 첫째, 하루 세끼의 식사가 가능하다. 상층에 속한다고 응답한 전체 응답자들 중 86.7%가 하루 세끼의 식사를 했다고 응답했다. 둘째, 주식은 거의 입쌀로 구성되어 있다. 상층에 속하는 전체 응답자들 중 81.3%가 거의 입쌀로 식사를 했다고 응답했다. 셋째, 고기는 거의 매일 먹거나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로 자주 섭취한다. 상층에 속하는 전체 응답자들 중 81.3%가 고기를 거의 매일 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먹었다고 응답했다. 넷째, 계절마다 한두 번 정도의 옷을 사 입을 수 있다. 상층에 속하는 전체 응답자들 중 81.3%가 계절마다 한두 번 정도의 옷을 구매했다고 응답했다. 다섯째, 살림집은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상층 전체 응답자의 62.5%가 단독주택에 살았다고 응답했다. 마지막으로, 소득수준(비공식수입)은 월 100만원 안팎의 수준이다. 상층에 속하는 전체 응답자들 중 50%가 월소득수준이 100만원 이상이었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중층의 생활은 첫째, 하루 세끼의 식사가 가능하다. 중층에 속한다고 응답한 전체 응답자들 중 86.5%가 하루 세끼의 식사를 했다고 응답했다. 둘째, 주식은 거의 입쌀이거나 입쌀과 강냉이를 반반씩 섞어 먹는다. 중층 전체 응답자의 73.7%가 거의 입쌀로 먹었거나 입쌀과 강냉이를 반반씩 섞어 먹었다고 응답했다. 셋째, 고기는 일주일에 한두 번 또

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먹는다. 중층 응답자들 중 81.2%가 고기를 일주일에 한두 번 또는 한 달에 한두 번 먹었다고 응답했다. 넷째, 계절마다 한두 번 또는 일 년에 한두 번 옷을 사 입을 수 있다. 중층 전체 응답자들 중 84%가 계절마다 한두 번 또는 일 년에 한두 번의 옷을 사 입었다고 응답했다. 다섯째, 살림집은 연립주택 또는 아파트의 비중이 크다. 중층의 전체 응답자들 중 25%가 아파트에서, 47.4%가 연립주택에서 살았다고 응답했다. 마지막으로, 소득수준(비공식수입)은 월 10만원~100만원 미만으로 비교적 소득범위가 넓은 편이다. 중층 전체 응답자의 58.5%가 이 구간대의 소득수준으로 응답했다.

마지막으로 하층의 생활은 첫째, 대다수는 하루 세끼 또는 적어도 두끼의 식사가 가능하다. 하층에 속한다고 응답한 전체 응답자들 중 89%가 하루 세끼 또는 두 끼의 식사를 했다고 응답했다. 둘째, 입쌀과 강냉이가 3:7로 섞이거나 거의 강냉이로 된 밥을 먹는다. 하층의 전체 응답자의 66.7%가 입쌀과 강냉이가 3:7로 섞였거나 거의 강냉이로 된 밥을 먹었다고 응답했다. 셋째, 고기는 일 년에 한두 번 정도만 먹는다. 하층 전체 응답자들 중 56%가 일 년에 한두 번 정도 고기를 먹었다고 응답했다. 넷째, 옷은 일 년 또는 몇 년에 한두 번 정도 구입이 가능하다. 하층 전체 응답자의 76.4%가 일 년 또는 몇 년에 한두 번 정도 옷을 사 입었다고 응답했다. 다섯째, 살림집이 대체로 연립주택이다. 하층 전체 응답자들 중 60%가 연립주택에서 살았다고 응답했고, 반면에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비중은 각각 16.5%, 15.3%에 불과했다. 마지막으로, 하층의 소득수준(비공식수입)은 10만원 미만이다. 하층 전체 응답자들 중 62.6%가 월소득이 10만원 미만이었다는 것으로 응답했다.

이상에서 계층별 생활양상을 재구성해본 결과, 식생활의 경우 주식보다는 부식에서, 또한 양적인 면보다는 질적인 면에서 더 계층 구분에 있어 변별력이 큼을 알 수 있다. 의생활의 경우는 의류의 원산지나 구매경로에서는 변별력이 없고 의류의 구매횟수에 따라 계층 간 확연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살림집의 경우는 상층일수록 단독주택을 선호하고, 중간층은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에서 거주하는 비중이 크다. 반면에, 하층 경우는 대부분이 연립주택에서 거주하고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비중이 매우 작다. 소득수준의 경우 공식적인 소득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공식적 소득수준이 계층 간 유의미한 차이를 드러냈다. 또한 계층 간 소득수준의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4. 평가와 시사점

이제까지 2012년과 2013년 조사의 북한주민의 식의주 생활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조사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우선, 북한주민의 식생활에서는 1년 사이에 양적 증가는 뚜렷하게 나타났지만, 질적 향상은 크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루 식사 횟수 응답률은 증가했지만, 주식의 구성과 고기 섭취 횟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특히, 주식 구성 성분과 동물성 단백질 섭취 등에서 계층 간 격차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다. 상층의 경우 하루 식사횟수나 주식 구성, 동물성 단백질 섭취에 큰 어려움이 없지만, 중간층과 하층으로 내려가면 주식에서 강냉이 비율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동물성 단백질 섭취도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계층 간 식생활 수준을 결정짓는 데는 고기섭취횟수(주식의 구성)하루 식사횟수 순서로 영향력의 차이가 나타났다.

다음으로, 의생활에서는 2012년과 마찬가지로 2013년 조사에서도 계층 간 격차가 가장 적게 나타났다. 먹는 문제에 비해 입는 문제는 상대적으로 덜 신경 쓰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층 간 격차(특히 중간층과 하층 간의 격차)가 크지 않았다. 의류 원산지는 북한산을 제치고 중국산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의류는 배급제가 아닌 시장을 통해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북한의 경공업 특히 소비재 산업의 기반이 얼마나 열악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문화적 측면에서는 한류의 영향이 매우 크면서도 경공업(특히 소비재) 상품에서 남한산의 비중은 매우 낮은 반면에 중국산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민족경제 차원에서 우려스러운 점이다.

마지막으로 주거 생활의 경우 소득수준 향상으로 아파트 거주자가 증가하고 주택시장이 더욱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살림집 유형보다는 살림집을 장만하는 경로가 더 뚜렷한 응답패턴을 보였는데, 경제력이 높을수록 자기가 직접 집을 짓는 경우가 많았으며 하층일수록 국가에서 배정해준 집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미 북한에서 집을 개인들 간에 사고파는 주택시장이 넓게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살림집 개조 희망사항에서는 의외의 결과가 나타났다. 화장실, 난방, 취사방식과 같이 주거의 인프라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욕구 보다 방의 수나 집의 크기를 늘리거나 집안 인테리어를 바꾸고 싶어하는 욕구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 흥미로웠다. 이것은 북한주민들에게 주거의 인프라 시설에 대한 불만이 없다기보다는 이미 그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적응력이 생겼으며, 오히려 소득수준이 오르면서 북한주민에게도 외적으로 과시하고 싶은 문화양식의 욕구가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별 생활수준을 비교해본 결과, 지역별 부(富)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집중화되고 있으며 고착화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두 차례의 조사에서 가장 잘사는 도와 시, 중간 정도 잘 사는 도와 시, 가장 못사는 도와 시의 순위가 변함이 없었다. 시장이 발달하고, 자본과 상품의 유입이 많은 지역으로 경제적 부가 집중되고 있다. 농촌지역, 국경과 거리가 먼 지역, 교통이 발달되지 않은 지역일수록 빈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계수입의 지출에서는 식의주 해결이 2년 연속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가계소득의 대부분이 생계 해결에 지출되고 있으나, 생계 문제 다음으로는 자녀교육에 가장 많이 지출되고 있어 남한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자녀에 대한 북한부모의 교육열 역시 높음을 알 수 있다.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사치품의 소비나 뇌물 등의 비중도 늘어나고 있다. 또 주목되는 결과는 식의주 관련 문항과의 교차분석에서 공식적인 소득은 통계적 유의성이 없으나 비공식적인 소득은 대부분의 문항들과 통계적으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경제영역에서 공식지표보다는 비공식지표가 북한사회의 실상을 파악하는데 더 현실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제까지 두 차례 실시된 조사의 결과를 통해 북한사회의 변동을 분석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일관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일정 기간 이 북한사회변동조사가 계속된다면 다른 어떤 자료보다도 북한사회의 변동과 실태를 매우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축적될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북한사회변동조사는 연구방법론상 몇 가지의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표본의 지역적 분포에서 함경북도와 양강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82.7%로 지역 쏠림현상이 크다는 점에서 표본의 대표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지역의 필드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탈북자를 대상으로 하는 간접 조사방식만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때 탈북자 모집단의 지역적 편중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표본의 대표성 문제는 늘 제기될 수밖에 없다. 또한 최근 입국하는 탈북자들의 탈북 동기가 과거와 같이 생계유지 또는 생존 목적인 경우가 압도적이지 않고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나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와 같이 탈북 동기가 다변화되고 있으며 북한에서의 생활수준도 비교적 나쁘지 않아 계층 구성 차원에서 대표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표본의 지역적, 계층적 편중 현상을 최대한 상쇄시키려는 조사의 방법론적 노력이다. 북한사회변동조사는 개인의 인식 또는 경험을 측정하는 것과 북한주민의 일반적 인식 또는 경험을 측정하는 것을 병행함으로써 균형을 맞추고자 하였다.

또다른 연구의 한계점은 응답자들이 이미 북한을 나와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로 조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시점과 조사에 응답하는 시점 간의 시간적 단절로 인해 그 사이에 기억의 변형 또는 인식의 변형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조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설문표현뿐만 아니라 조사를 시행하기 전에 조사 참여자들에게 설문표현의 측정 시점과 공간이 북한에 거주하던 시기임을 수차례 강조하였다.

지금까지 이 장에서 기술한 것은 북한사회의 식의주 생활의 변화에 대한 매우 기초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식의주 생활의 변화가 전

체 북한사회의 변동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횡단적 또 종단적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어떠한 요인들이 식의주 생활에서 계층적 분화를 촉발시키고 있는지 좀 더 면밀한 심층분석이 뒤따라야 할 뿐만 아니라, 시기별로 이러한 변화가 어떤 패턴을 보이고 있는지는 이후 장기간에 걸쳐 주기적인 조사를 통해 추적해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들은 이 조사연구가 앞으로 계속 수행해야 할 과제일 것이다.

제3장

시장화와 소득분화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제3장

시장화와 소득분화

1. 시장화란

시장화란 계획경제체제의 관료적 조정메커니즘에 대비되는 시장조정메커니즘의 역할이 증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북한의 시장화는 전근대부터 다양한 형태와 수준으로 존재해왔던 교환의 장소로서의 시장이 확산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시장 메커니즘의 도입과 확산을 의미한다.²⁶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조정메커니즘의 확산은 계획경제의 핵심요소인 관료적 조정메커니즘의 약화를 가져온다. 관료적 조정은 수직적인 위계질서에 따라 명령에 의해 자원이 배분되는 체계로서, 조정하는 개인이나 조직인 상위자와 조정되는 개인이나 조직인 하위자 간의 수직적이고 비대칭적인 구조이며 정보는 아래에서 위로 흐른다. 반면 시장조정메커니즘은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수평적인 관계에 기초하여 자발적으로 체결한 계약에 따라 자원이 배분되는 체계로서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가 발생하는 유인은 물질적 이득의 확보이다. 시장조정메커니즘의 체

26_ 양문수, "북한의 시장화: 추세와 구조 변화," 『북한경제리뷰』, 2013년 6월호, p. 47.

계에서 정보는 화폐의 흐름을 따라 이동하는데 이때 가장 특징적인 정보가 가격이다.²⁷

북한에서도 시장 메커니즘은 다소간의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면서 꾸준히 확산되고 있다. 북한에서 도시지역까지 포괄하는 시장경제활동은 인민소비품증산운동(소위 8.3조치)이 시작된 1980년대 중반부터 토대가 쌓이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으나, 국가의 공급이 중단되고 사실상 계획경제가 무너진 1990년대 중반 소위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급속히 확산되었고,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와 이후 이어진 개혁조치들에 따라 부분적으로 제도화되기도 하였다. 제도화의 대표적인 사례가 2003년부터 도시를 중심으로 전국에 300여 개 정도 만들어진 종합시장이다.²⁸ 그 과정에서 개인뿐 아니라 공장과 기업소를 비롯한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시장경제활동에 참가하게 되었고, 종합시장과 농민시장을 축으로 한 소비재 시장뿐 아니라 비공식적이지만 '돈주'의 등장과 같은 자본시장이나 샅벌이 형태의 노동시장도 생겨났으며, 가격과 같이 시장조정메커니즘의 핵심적인 요소들의 역할도 확대되었다. 물론 그 과정에서는 개혁적인 요소의 후퇴도 있었다. 2008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6.18 담화'로 시장조정메커니즘의 제도화를 의미하는 개혁조치들이 완전히 중단되었고²⁹ 2009년 11월에는 전격적인 화폐개혁마저 단행되면서 시

27_ Janos Kornai,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pp. 91~92.

28_ 한기범, "북한 정책결정과정의 조직행태와 관료정치: 경제개혁 확대 및 후퇴를 중심으로(2000-09)"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2010), p. 141.

29_ 위의 논문, pp. 226~227.

장 자체가 급격히 위축되고 통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9년 화폐개혁과 시장폐쇄 조치의 실패 및 철회에서 보듯 국가의 시장통제나 억제시도는 실패하였다. 2012년 김정은 정권이 출범한 이후에는 소위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연구완성’을 위한 실험적 조치들이 취해지면서 다시 시장조정메커니즘을 활용하기 위한 시도들도 이루어지고 있다.³⁰

북한에서 시장메커니즘의 확산은 주민들이 사적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을 창출한다. 동원할 수 있는 자본의 규모에 따라 그 성격의 차이가 크긴 하지만, 유통부문에서는 소매장사부터 도매와 수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적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생산부문에서도 공식적으로는 생산수단의 사유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규모의 가내수공업부터 기관이나 공장기업소 명의로 생산수단을 보유하고 이를 활용하여 상품을 생산, 판매하거나 국가소유인 공장기업소의 설비 자체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사적 경제활

30_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북한이 추진 중인 시범적인 경제관리개선 조치에 대해서는 리태호, “우리 식의 경제관리방법의 완성을/내각 관계자 인터뷰,” 『조선신보』, 2013년 5월 10일; 김지영,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 식의 경제관리방법,’” 『조선신보』, 2013년 12월 24일; “우리 식 경제관리방법 현장레포트 (상): 생산효율에 대한 추구와 새 품종 개발,” 『조선신보』, 2013년 12월 24일; “우리 식 경제관리방법 현장레포트 (하): 농민들의 의식개조와 증산의 실현,” 『조선신보』, 2013년 12월 25일; “인터뷰: 김정하 내각사무국장/인민생활중시의 정책집행,” 『조선신보』, 2013년 12월 27일; 리태호, “경제관리개선/조치 실시 1년, 생산현장의 변화,” 『조선신보』, 2014년 4월 2일 등 보도와 김석진, “북한의 ‘경제관리방법’ 개혁 동향과 전망,” 『통일경제』, 2013년 겨울호; 양문수,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모색: 현황과 평가,” 『KDI 북한경제리뷰』, 2014년 3월호 등 참조. 주요한 조치로 농업부문에서는 분조관리제 강화를 축으로 3~5명을 단위로 토지를 구획하여 담당하는 포전담당제, 공업부문에서는 국가계획만 달성하면 공장기업소가 자체적으로 상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초과수익도 자율적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채산제의 강화, 유통부문에서는 국영상업망의 강화를 모색하는 가운데 주문제 상품유통체계나 계획 외 초과생산물이나 계획 외 생산 상품의 판매체계의 구축 등이 있다.

동들이 확산되고 있다. 생산부문의 사적 경제활동은 특히 재산권의 실질적인 변동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³¹ 소유권이 아니라 자산에 대한 이용권리, 자산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권리 그리고 자산의 처분과 양도에 대한 권리로 세분되는 재산권의 측면에서 보면³² 과거와 같은 경제관리 개선이든 최근과 같은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연구완성이든 생산주체의 자율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처분과 양도권을 제외한 이용권과 수익권은 비록 비공식적으로나마 생산주체가 자율적으로 행사할 여지가 커지기 때문이다.

사적 경제활동의 증가는 주민들 간의 소득 격차를 확대시킬 수밖에 없다. 자본의 규모에 따라 사적 경제활동의 수준과 범위가 달라지면서 그로 인한 소득 자체의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데다, 자본이 없는 경우 자본을 가진 사업자에게 고용되는 형식으로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서 이는 결과적으로 자본과 임노동 관계까지 창출하게 된다. 그 결과 사적 경제활동 종사자와 비종사자 사이에, 그리고 사적 경제활동 종사자들 내부에서도 다양한 소득분화들이 발생하게 된다.

게다가 생산부문에서의 자율성 증대도 공식적인 임금의 격차를 확대하고 있다. 과거 7.1경제관리개선 조치 이후 공장기업소의 성과지표로 번수입지표를 사용한 것이나 최근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의 일환으로 공장기업소가 초과수익을 자율적으로 처

31_ 북한에서 발생하고 있는 재산권의 비공식 이행에 대해서는 임강택, 『북한 재산권의 비공식 이행』 (서울: 통일연구원, 2003) 참조.

32_ Janos Kornai, *The socialist system*, pp. 64~66.

분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진 것은, 결과적으로 가동률이나 수익이 높은 공장기업소가 근로자들에게 높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해준다.³³

이 조사연구의 목적은 시장메커니즘의 확산이 사적 경제활동의 확산뿐 아니라 주민들의 소득분화를 촉진하면서 과거 계획경제체제와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는 북한 사회의 변화 실태를 보다 실증적으로 추적하는 것이다. 북한의 시장화와 관련하여 사적 경제활동 종류 및 그와 연관된 문제점이나 어려움, 사유화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등을 파악하고, 소득분화와 관련해서는 소득수준과 함께 빈부격차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아울러 조사 직전연도에 탈북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특성상 공식/계획 경제와 대비되는 비공식/사적/시장³⁴ 경제의 규모를 추정하거나 시장경제활동의 제도화 등을 포괄하여 개혁개방 또는 체제전환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았다. 이런 점에서 주민들의 생활 속에 시장경제활동이 어떤 형태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지가 이번 조사의 주요한 추적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조사는 북한 경제의 시장화나 북한 사회의 소득분화를 추적한 기존의 연구들과³⁵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차이가 난다. 먼저 조사대상 시기가 다르다. 기존 연구들 가운데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의 경우 대부분 2009년 북한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남인 김정은이 후계자로

33_ 이상용, “北 ‘6·28방침’ 본격화... 물가반영 임금 100배 인상,” 『데일리엔케이』, 2013년 11월 6일; “평양 피복 공장에도 9월부터 월급 100배 인상,” 『데일리엔케이』, 2013년 11월 29일; 리태호, “경제관리 개선/조치 실시 1년, 생산현장의 변화,” 『조선일보』, 2014년 4월 2일 등 참조.

34_ 북한경제에서 공식/계획, 비공식/사적/시장 경제 논의에 대해서는 이석기 외, 『북한 경제 쟁점 분석』 (서울: 산업연구원, 2013) 참조.

내정되기 이전에 북한을 벗어난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따라서 최근의 상황이 충실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2008년 북한인구조사 자료를 활용한 연구도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 조사연구는 비교적 최근의 북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다소나마 극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소득분화에 대한 연구도 시장화와 소득분화를 실증적 자료에 기초하여 종합적으로 연계, 분석하지는 않고 있다. 특히 조사방식과 관련하여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관련된 조사를 진행하더라도 소수의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질적인 분석을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기존 연구들보다 상대적으로 다수의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양적인 분석을 시도면서 시장화와 소득분화를 종합적으로 연계, 분석한 것이 이 조사연구의 또 다른 특징일 수 있다. 다만 탈북자 대상 조사에서 항상 제기되는 조사표본의 문제를 감안하면 과도한 일반화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조사연구는 최근 연도인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직전

35_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진 북한 경제의 시장화에 대한 조사연구로는 이영훈, 『탈북자를 통한 북한경제 변화상황 조사』 (서울: 금융경제연구원, 2007); 임강택, 『북한경제의 시장화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9); 양문수, 『북한경제의 시장화: 양태, 성격, 메커니즘』 (파주: 한울, 2010); 김병연 외, 『북한 경제에서의 시장과 정부』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정형근 외, 『북한의 시장화 현황과 경제체제의 변화 전망』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이석기 외, 『북한 경제 쟁점 분석』 등이 있고, 소득분화나 계층구조 변화에 대해서는 이승훈·홍두승, 『북한의 사회경제적 변화: 비공식 부문의 대두와 계층구조의 변화』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최봉대, “1990년대 말 이후 북한 도시 사적 부문의 시장화와 도시가구의 경제적 계층분화,” 『현대북한연구』, 제11권 2호 (2008); 김수암 외, 『북한 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인식』 (서울, 통일연구원, 2011); 김병로, “북한의 시장화와 계층구조의 변화,” 『현대북한연구』, 제16권 1호(2013) 등이 있다.

연도 탈북자 130명 정도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제한적이거나 비교적 최근의 실태를 파악하고 시장화와 소득분화를 실증이고 종합적으로 살펴본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는 다소 차별화된 의미를 지니고 있다.

2. 경제의 시장화

1) 장사경험

북한의 일반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적 경제활동은 장사이다. 장사는 자본의 규모에 따라 수입과 도매로부터 중도매와 소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고, 종합시장 등에서 매대를 임대하여 할 수도 있지만 행상처럼 고정된 장소를 갖지 않고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국가의 공급이 중단되고 자력갱생이 강요되는 상황에서 많은 주민들이 주업이나 부업으로 장사에 종사했던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이번 조사에서 조사 대상자 중 장사경험을 가진 경우는 2012년과 2013년도 전체 조사대상자 259명 중 188명으로 72.6%를 차지하였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도 조사에서 장사경험을 가진 사람이 69.8%를 차지하였으나 2013년도 조사에서는 그 비율이 5.4% 증가한 75.2%를 차지하였다.

〈표 30〉 장사경험 여부

단위: 명, %

구분	있다	없다	전체
2012년	88	38	126
	69.8	30.2	100.0
2013년	100	33	133
	75.2	24.8	100.0
전체	188	71	259
	72.6	27.4	100.0

주민들의 장사활동과 관련 1997년부터 2009년까지 탈북한 북한 주민 87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김병연과 양문수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작 및 축산 이외의 부업활동이나 경작 및 축산과 함께 다른 부업활동에도 종사한 비율은 조사대상자의 83.2%에 달하였고, 이 가운데 경작 및 축산 이외의 부업으로 되거리 장사(57.0%)나 밀매업(12.7%), 음식장사(11.8%) 등에 종사한 비율은 81.5%에 달하였다.³⁶ 이렇게 보면 2009년 이후 화폐개혁과 일시적인 시장통제로 장사활동이 다소 주춤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북한 내에서 장사경험을 가진 비율은 최소한 70% 이상으로, 장사는 가장 많은 주민들이 종사하는 사적 경제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장사경험 여부를 보면 전체적으로 여성들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성별 차이가 좁혀질 가능성도 보이고 있다. 2012년 조사의 경우 남성이 60.0%를 차지한 반면 여성은 이보다 17.5%나 높

36_김병연·양문수, 『북한 경제에서의 시장과 정부』, p. 31.

은 77.5%를 차지하였지만, 2013년의 조사에서는 남성의 장사경험 비율이 직전 해보다 14.6% 높아지면서 그 차이가 1.1%로 좁혀졌다. 이렇게 보면 장사는 흔히 여성들이 부업으로 종사하는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성도 종사하는 핵심적인 생계유지나 부의 축적 수단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을 가능성도 주목된다.

〈표 31〉 성별 장사경험 여부

단위: 명, %

구분		있다	없다	전체
2012년	남성	33	22	55
		60.0	40.0	100.0
	여성	55	16	71
		77.5	22.5	100.0
2013년	남성	44	15	59
		74.6	25.4	100.0
	여성	56	18	74
		75.7	24.3	100.0
전체	남성	77	37	114
		67.5	32.5	100.0
	여성	111	34	145
		76.6	23.4	100.0

장사경험 여부를 세대별로 살펴보면 30대와 40대가 가장 활발하게 장사에 종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장사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한 명인 10대를 제외하면 30대의 경우 94.2%, 40대의 경우는 84.7%가 장사경험을 갖고 있었고, 50대의 경우도 장사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72.4%로 나타났다. 반면 20대의 경우는 55.2%, 60대 이상의 경우는 53.3%가 장사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2〉 연령대별 장사경험자 비중

단위: 명, %

구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2012년	0	0.0	25	56.8	21	91.3	27	79.4	10	76.9	5	41.7
2013년	1	33.3	23	53.5	28	96.6	34	89.5	11	68.8	3	100.0
전체	1	33.3	48	55.2	49	94.2	61	84.7	21	72.4	8	53.3

* 연도별·연령대별 응답자 중 장사 유경험자 비율(%)

한편 학력수준에 따른 장사경험 여부를 살펴보면 전문학교와 고등중학교 졸업 학력자가 가장 활발하게 장사활동에 종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빈도가 낮은 인민학교와 무학을 제외하면 전문학교 졸업자 가운데 76.3%, 고등중학교 졸업자 가운데 75.1%가 장사경험을 갖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대학(교) 이상의 학력 보유자 가운데 57.1%가 장사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 교육수준별 장사경험자 비중

단위: 명, %

구분	대학(교) 이상		전문학교		고등중학교		인민학교		무학	
2012년	5	38.5	18	78.3	59	72.0	2	50.0	2	100.0
2013년	15	68.2	11	73.3	74	77.9	0	0.0	0	0.0
전체	20	57.1	29	76.3	133	75.1	2	50.0	2	66.7

* 연도별·교육수준별 응답자 중 장사 유경험자 비율(%)

직업에 따른 장사경험자 비중을 살펴보면, 장사를 전업으로 했다는 응답을 제외하고, 가정부인과 외화벌이 일군 그리고 노동자 층에서 장사경험자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가정부인의 경우 91.7%, 외화벌이 일군의 경우 83.3%, 노동자의 경우는 72.2%가 장사경험을 갖고 있다고 응답하

였다. 그 다음으로 교원, 의사, 기술자 등 전문가 집단의 경우 이보다 다소 낮은 60.0%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농민들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응답자의 수가 적긴 하지만 46.7%밖에 되지 않은 점이 주목된다.

〈표 34〉 직업별 장사경험자 비중

단위: 명, %

구분	노동자	농민	사무원	전문가	학생	군인	외화 벌이	가정 부인	무직 기타
2012년	33 70.2	6 54.5	3 50.0	6 66.7	3 37.5	1 25.0	2 66.7	13 92.9	5 62.5
2013년	32 74.4	1 25.0	9 69.2	6 54.5	3 37.5	4 66.7	3 100.0	20 90.9	4 80.0
전체	65 72.2	7 46.7	12 63.2	12 60.0	6 37.5	5 50.0	5 83.3	33 91.7	9 69.2

* 연도별·직업별 응답자 중 장사 유경험자 비율(%)

마지막으로 당원 여부는 장사경험과 큰 관련성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당원의 경우 장사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68.4%였고 비당원의 경우 73.5%로, 비당원 중 장사경험자 비중이 당원 중 장사경험자 비중보다 5.1% 높지만, 대체로 70% 전후로 비슷한 수준의 장사경험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35〉 당원 여부별 장사경험 여부

단위: 명, %

구분		있다	없다	전체
2012년	당원	10 55.6	8 44.4	18 100.0
	비당원	77 72.6	29 27.4	106 100.0
2013년	당원	16 80.0	4 20.0	20 100.0
	비당원	84 74.3	29 25.7	113 100.0
전체	당원	26 68.4	12 31.6	38 100.0
	비당원	161 73.5	58 26.5	219 100.0

2) 주된 수입원

북한에 거주할 당시 가장 많은 수입을 얻었던 일거리에 대해 응답자들의 1/3 이상이 소매장사라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이 외화벌이와 되거리장사 그리고 샅벌이 순이었다. 소매장사의 경우 37.7%, 외화벌이는 11.2%, 되거리장사가 8.1%였으며, 그 다음으로 노동력 판매인 샅벌이가 7.2%, 사채업이라고 할 수 있는 돈장사가 5.8%로 뒤를 이었다. 그리고 서비스업종인 개인편의봉사가 5.4%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생산부문일 수 있는 개인(임)가공은 2012년 1.9%에서 2013년 4.3%로 미세하나마 늘어

나기는 하였지만 전체적으로 3.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 비율이 소매장사 다음으로 큰 기타를 보면 개인적인 소토지 농사가 타인을 임시로 고용한 경우까지 포함해 3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1.4%를 차지하였고 밀수나 송금 중개, 이산가족 상봉 등 중국을 상대로 한 사업이 16명으로 전체의 7.2%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북한에서의 사적 경제활동이 여전히 유통부문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표 36〉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 단위: 명.%

구분	소매장사	개인 편의 봉사	개인 (임) 가공	식당 상점 임대	퇴거리 장사	외화 벌이	돈 장사	샅 벌이	해외 파견	기타	전체
2012년	39	5	2	2	11	11	7	4	1	24	106
	36.8	4.7	1.9	1.9	10.4	10.4	6.6	3.8	0.9	22.6	100.0
2013년	45	7	5	0	7	14	6	12	2	19	117
	38.5	6.0	4.3	0.0	6.0	12.0	5.1	10.3	1.7	16.2	100.0
전체	84	12	7	2	18	25	13	16	3	43	223
	37.7	5.4	3.1	0.9	8.1	11.2	5.8	7.2	1.3	19.3	100.0

북한에서 가장 많은 수입을 얻은 일거리 종사기간을 보면 전체적으로 5년 이상이 44.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3년 이상으로 보면 59.9%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2013년 조사에서는 2012년 조사에 비해 대체적으로 종사기간이 길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먼저 3년 미만은 2012년 49.5%에서 2013년 32.0%로 17.5% 줄었다. 이 가운데 6개월 미

만은 7.9%가 감소하였고 특히 1년 이상~3년 미만은 11.4%나 줄어들었다. 반면 3년 이상은 2012년 50.5%에서 2013년 68.1%로 17.6% 증가하였다. 이 가운데 가장 크게 증가한 기간은 5년 이상으로, 2012년 35.0%에서 2013년 52.1%로 17.1% 증가하였다.

〈표 37〉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 종사기간 단위: 명.%

구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전체
2012년	16	6	29	16	36	103
	15.5	5.8	28.2	15.5	35.0	100.0
2013년	9	9	20	19	62	119
	7.6	7.6	16.8	16.0	52.1	100.0
전체	25	15	49	35	98	222
	11.3	6.8	22.1	15.8	44.1	100.0

북한에서 가장 많은 수입을 얻은 일거리 종사기간은 학력이나 뇌물의 규모, 당원 여부와는 큰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 대신, 연령대와는 어느 정도 상관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종사기간을 보면 5년 이상의 경우 60대 이상이 66.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40대 53.8%, 50대 47.6%를 보였다. 20대의 경우 34.7%로 가장 낮았으며 30대도 36.7%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반면 6개월 미만에서는 20대가 20.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이 10.2%를 차지한 30대였으며 50대의 경우 9.5%, 60대 이상은 8.3%, 40대는 3.1%로 나타났다.

〈표 38〉 연령대별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 종사기간

단위: 명.%

구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전체
10대	0	0	0	1	1	2
	0.0	0.0	0.0	50.0	50.0	100.0
20대	15	5	14	13	25	72
	20.8	6.9	19.4	18.1	34.7	100.0
30대	5	5	12	9	18	49
	10.2	10.2	24.5	18.4	36.7	100.0
40대	2	4	15	9	35	65
	3.1	6.2	23.1	13.8	53.8	100.0
50대	2	1	5	3	10	21
	9.5	4.8	23.8	14.3	47.6	100.0
60대 이상	1	0	3	0	9	13
	8.3	0.0	25.0	0.0	66.7	100.0
전체	25	15	49	35	98	222
	11.3	6.8	22.1	15.8	44.1	100.0

직업에 따른 종사기간을 살펴보면 탈북이라는 계기적 특성이 반영된 것일 수 있으나, 특수한 신분일 수 있는 군인이나 학생을 제외하면, 5년 이상 종사자의 경우 외화벌이>전문가>사무원 순으로 50%를 넘었고, 그 다음으로 장사>가정부인>노동자 순으로 40%대를 차지하였으며 농민의 경우는 27.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반면 6개월 미만의 경우 외화벌이가 20.0%로 가장 높고 노동자>농민>가정부인 순으로 10%대로 나타났다. 농민들의 경우 다른 직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1년 이상-3년 미만이 54.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표 39〉 직업별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 종사기간

단위: 명.%

구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전체
노동자	13	3	15	16	33	80
	16.3	3.8	18.8	20.0	41.3	100.0
농민	2	0	6	0	3	11
	18.2	0.0	54.5	0.0	27.3	100.0
사무원	0	1	1	5	9	16
	0.0	6.3	6.3	31.3	56.3	100.0
전문가	1	1	4	1	10	17
	5.9	5.9	23.5	5.9	58.8	100.0
학생	3	1	2	1	4	11
	27.3	9.1	18.2	9.1	36.4	100.0
군인	0	2	6	0	2	10
	0.0	20.0	60.0	0.0	20.0	100.0
외화벌이	1	0	0	0	4	5
	20.0	0.0	0.0	0.0	80.0	100.0
장사	0	4	7	5	14	30
	0.0	13.3	23.3	16.7	46.7	100.0
가정부인	4	2	5	6	13	30
	13.3	6.7	16.7	20.0	43.3	100.0
무직.기타	1	1	2	1	6	11
	9.1	9.1	18.2	9.1	54.5	100.0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에 따른 종사기간을 살펴보면 같은 일거리 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비중이, 기타를 제외하면, 해외파견>개인 편의 봉사>삿벌이 순으로 50%를 상회하였고, 소매장사>개인 (임)가공>외화벌이 순으로 40%대를 보였으며, 되거리 장사가 20%대, 돈장사가 10%대

의 비중을 나타냈다. 빈도가 낮은 해외파견을 제외하면 개인 편의봉사가 가장 오랫동안 지속되고, 돈장사가 가장 부침이 심하며, 도매에 해당하는 되거리 장사도 상대적으로 부침이 심한 업종인 것으로 보인다.

〈표 40〉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별 종사기간 단위: 명, %

구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전체
소매장사	10	6	19	8	41	84
	11.9	7.1	22.6	9.5	48.8	100.0
개인 편의봉사	1	1	1	2	7	12
	8.3	8.3	8.3	16.7	58.3	100.0
개인 (임)가공	1	0	2	1	3	7
	14.3	0.0	28.6	14.3	42.9	100.0
식당, 상점 임대	0	0	1	1	0	2
	0.0	0.0	50.0	50.0	0.0	100.0
되거리장사	4	1	6	1	4	16
	25.0	6.3	37.5	6.3	25.0	100.0
외화벌이 계통	2	5	2	6	10	25
	8.0	20.0	8.0	24.0	40.0	100.0
돈장사	3	1	7	0	2	13
	23.1	7.7	53.8	0.0	15.4	100.0
샅벌이	1	0	3	3	9	16
	6.3	0.0	18.8	18.8	56.3	100.0
해외 파견	1	0	0	0	2	3
	33.3	0.0	0.0	0.0	66.7	100.0
기타	2	1	6	13	19	41
	4.9	2.4	14.6	31.7	46.3	100.0
전체	25	15	47	35	97	219
	11.4	6.8	21.5	16.0	44.3	100.0

3) 주된 수입원 종사 시 애로사항 및 뇌물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에 종사하면서 부딪힌 1순위 애로사항 중에서는 자금마련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금 마련 문제는 2012년 47.5%, 2013년 52.1%로 나타났고, 전체적으로 50.0%로서 절반을 차지하였다.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인 것은 같은 업종의 경쟁자들이나 수입상품과의 판매경쟁이었다. 이는 북한에서 사적 경제활동이 유통 부문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나 그마저도 제도 미비나 각종 통제와 단속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진입이 자유롭지 못하여 경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³⁷⁾

〈표 41〉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 종사 시 가장 컸던 애로사항(1순위)

단위: 명, %

구분	사업 수완 부족	사업 자금 마련	상품 원자재 확보	판매 경쟁	도로 철도 사정	전기 사정	단속 뇌물 제공	전체
2012년	6	47	16	6	7	7	10	99
	6.1	47.5	16.2	6.1	7.1	7.1	10.1	100.0
2013년	10	62	13	4	18	10	2	119
	8.4	52.1	10.9	3.4	15.1	8.4	1.7	100.0
전체	16	109	29	10	25	17	12	218
	7.3	50.0	13.3	4.6	11.5	7.8	5.5	100.0

37) 경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다른 조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김병연과 양문수의 조사에 따르면 2007년 이후 현금소득이 감소하였다는 응답비율이 49.4%로 약 50%에 달하였는데 현금수입이 감소한 가장 큰 원인은 시장에 대한 당국의 단속 강화였고, 그 다음이 장사밀천의 감소와 물가상승에 따른 구매자 수 감소였으며 물품 판매자 수 증가와 구매자 수 정체는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은 세외부담의 지속적인 증가였다(김병연·양문수, 『북한 경제에서의 시장과 정부』, pp. 85~86).

따라서 현재의 북한 실정에서 주민들의 시장경제활동 활성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은 자금조달 문제이고 이는 금융개혁문제와 직접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여신과 수신기능을 갖춘 상업은행이 설립되어야 사업의 확장과 자본의 축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은 2004년 박봉주 총리 주도의 내각 상무조가 7.1경제관리개선 조치에 이은 추가개혁을 위해 중국의 금융제도를 참고하여 금융개혁안을 만들고³⁸ 2006년에는 상업은행법을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상업은행을 설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개혁조치를 평가하는 핵심적인 요소로서 사적 경제활동의 합법화와 더불어 금융개혁 문제를 우선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주된 수입을 얻었던 일거리에 종사하면서 부딪혔던 2순위 애로사항에서는 국가기관의 단속이나 사업을 위한 뇌물제공이 전체적으로 59.6%를 차지하여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는 북한에서 부패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42〉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 종사 시 가장 컸던 애로사항(2순위)

단위: 명, %

구분	사업 자금 마련	상품 원자재 확보	판매 경쟁	도로 철도 사정	전기 사정	단속 뇌물 제공	기타	전체
2012년	2	8	2	7	7	47	3	76
	2.6	10.5	2.6	9.2	9.2	61.8	3.9	100.0
2013년	1	11	8	13	12	68	4	117
	0.9	9.4	6.8	11.1	10.3	58.1	3.4	100.0
전체	3	19	10	20	19	115	7	193
	1.6	9.8	5.2	10.4	9.8	59.6	3.6	100.0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에 종사하면서 겪은 애로사항 가운데 부패 문제와 관련하여 단속이나 뇌물제공에 대한 일거리별 인식을 살펴보면, 일거리별로 약간의 차이도 보이고 있다. 돈장사가 90.9%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외화별이가 83.3%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샅별이, 개인편 의봉사가 60%대로 조사되었다. 퇴거리장사의 경우는 50%였고 소매장사의 경우는 가장 낮은 43.8%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에서 사적 경제활동이 지닌 '위협성'이나 권력과의 유착 정도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38. 한기범, "북한 정책결정과정의 조직행태와 관료정치: 경제개혁 확대 및 후퇴를 중심으로(2000~09)", pp. 185~186. 한기범에 따르면 당시 내각 상무조는 산업부문별 국책은행, 기업대부용 상업은행, 외화 관리와 해외자본유치를 위한 무역은행 등을 설립하고 은행독립, 신용대출 제도 보장, 비밀주의 등을 제도화하는 개혁안을 마련하였다.

〈표 43〉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별 애로사항(2순위)

단위: 명.%

구분	사업 자금 마련	상품 원자재 확보	판매 경쟁	도로 철도 사정	전기 사정	단속 뇌물 제공	기타	전체
소매장사	1	9	8	14	7	32	2	73
	1.4	12.3	11.0	19.2	9.6	43.8	2.7	100.0
개인편의 봉사	0	1	0	1	2	6	0	10
	0.0	10.0	0.0	10.0	20.0	60.0	0.0	100.0
개인(임) 가공	0	0	0	1	2	3	0	6
	0.0	0.0	0.0	16.7	33.3	50.0	0.0	100.0
식당·상점 임대	0	0	0	0	0	1	1	2
	0.0	0.0	0.0	0.0	0.0	50.0	50.0	100.0
퇴거리장사	1	3	1	2	0	8	1	16
	6.3	18.8	6.3	12.5	0.0	50.0	6.3	100.0
외화벌이	0	2	0	0	2	20	0	24
	0.0	8.3	0.0	0.0	8.3	83.3	0.0	100.0
돈장사	0	0	0	0	0	10	1	11
	0.0	0.0	0.0	0.0	0.0	90.9	9.1	100.0
삿벌이	1	0	0	1	2	9	1	14
	7.1	0.0	0.0	7.1	14.3	64.3	7.1	100.0
해외파견	0	0	1	0	0	2	0	3
	0.0	0.0	33.3	0.0	0.0	66.7	0.0	100.0
기타	0	3	0	1	4	22	1	31
	0.0	9.7	0.0	3.2	12.9	71.0	3.2	100.0

이와 관련하여 북한에 거주할 당시 수입 중에서 뇌물로 제공되는 비중을 살펴보면, 우선 전체 조사대상자의 88.1%가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입 중 10% 이하를 뇌물로 제공한 경우가 25.7%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이 20% 초과~30% 이하로 18.2%, 10% 초과~20% 이하가 17.4%를 차지하였다. 수입의 절반 이상을 뇌물로 제공한 경우도 9.1% 나 되었다. 2012년과 2013년을 비교하면 뇌물을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13.9%에서 9.9%로 4.0% 줄어들고 50% 이상을 제공했다는 응답도 11.5%에서 6.9%로 4.6% 줄어든 반면, 수입의 40~50% 정도를 뇌물로 제공했다는 응답은 5.8% 증가하였고, 20% 이하의 경우도 크지는 않지만 다소 증가한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뇌물제공의 규모는 작아졌지만 뇌물제공 빈도는 높아졌을 가능성이 주목되는데 이는 부패의 확산을 의미할 수도 있다.³⁹

〈표 44〉 수입 중 뇌물 비중

단위: 명.%

구분	전혀 없음	10% 이하	20% 이하	30% 이하	40% 이하	50% 이하	50% 이상	전체
2012년	17	30	20	23	12	6	14	122
	13.9	24.6	16.4	18.9	9.8	4.9	11.5	100.0
2013년	13	35	24	23	13	14	9	131
	9.9	26.7	18.3	17.6	9.9	10.7	6.9	100.0
전체	30	65	44	46	25	20	23	253
	11.9	25.7	17.4	18.2	9.9	7.9	9.1	100.0

39. 북한에 만연한 부패에 대해서는 박형중 외, 『북한 부패 실태와 반부패 전략: 국제협력의 모색』(서울: 통일연구원, 2012); 박형중, “북한 시장에 대한 정치학적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제46집 제5호(2013), pp. 207-221; 박형중, “정치체제와 부패의 세 가지 모델: 북한 부패 연구를 위한 이론적 모델의 모색,” 『국방연구』, 제56권 제2호(2013년), pp. 47-65. 참조.

4) 주된 수입원 종사 시 상품 및 원자재 출처

북한에서 사적 경제활동에 종사하면서 사용한 상품이나 원자재의 출처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중국산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큰 가운데, 2012년에 비해 2013년의 경우 상대적으로 중국산 및 남한산의 비중이 줄고 북한산의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산의 비중이 66.8%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북한산으로 29.8%를 차지하였다. 반면 남한산은 2.9%, 일본산은 0.5%에 불과하였다. 2012년과 2013년을 비교해서 보면 중국산의 비중은 73.0%에서 62.2%로 10.8% 감소한 데 비해 북한산은 22.5%에서 35.3%로 12.8% 증가하였다. 남한산도 4.5%에서 1.7%로 2.8% 감소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 내에서 자원이용의 효율성이 증가하거나 북한 경제상황이 다소 개선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향후 추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⁴⁰

〈표 45〉 장사물건이나 사업용 원자재 출처

단위: 명.%

구분	북한	중국	남한	일본	전체
2012년	20	65	4	0	89
	22.5	73.0	4.5	0.0	100.0
2013년	42	74	2	1	119
	35.3	62.2	1.7	0.8	100.0
전체	62	139	6	1	208
	29.8	66.8	2.9	0.5	100.0

장사물건이나 원자재 출처별로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를 살펴보면 북한산을 사용한 경우는 주로 소매장사나 외화벌이인 것으로 나타났

다. 소매장사의 경우 29.5%, 외화벌이의 경우 21.3%를 각각 차지하였다. 중국산을 사용한 경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일거리가 소매장사로서 45.3%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북한산을 사용한 경우의 소매장사보다 15.8% 높은 것으로 중국산 상품의 북한시장 내 유통 확산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남한산의 경우 주목되는 것이 50.0%를 차지한 돈장사이다. 이들은 남한에 연고를 갖고 있는 경우로, 남한에서 송금된 자본으로 돈장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표 46〉 장사물건이나 사업용 원자재 출처별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

단위: 명.%

구분	소매장사	개인 편의 봉사	개인 (임) 가공	식당 상점 임대	되거리 장사	외화 벌이	돈장사	샅 벌이	해외 파견	기타	전체
북한	18	2	2	0	6	13	2	4	1	13	61
	29.5	3.3	3.3	0.0	9.8	21.3	3.3	6.6	1.6	21.3	100.0
중국	62	9	4	1	9	11	7	12	2	20	137
	45.3	6.6	2.9	0.7	6.6	8.0	5.1	8.8	1.5	14.6	100.0
남한	1	1	0	1	0	0	3	0	0	0	6
	16.7	16.7	0.0	16.7	0.0	0.0	50.0	0.0	0.0	0.0	100.0
일본	0	0	0	0	0	0	0	0	0	1	1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100.0

40. 일반적으로 공식적인 계획경제가 건재한 경우, 생산성이 낮은 생계형 활동이 주를 이루는데다 시장경제 활동에 안정성을 부여할 법과 제도가 갖추어지지 않아 비공식경제는 건강한 시장경제로 기능하거나 발전하기 어렵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공식적인 경제가 상당히 무너진 이후에 활성화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구 사회주의 국가들보다 더 발전하고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더 클 가능성이 존재한다(이석기 외, 『북한 경제 쟁점 분석』, pp. 68-77).

5) 주된 수입원 종사 시 타인 고용

북한 내에서 사적 경제활동이 자본-임노동관계로 발전하고 있는지는 북한 내 시장의 발달뿐 아니라 사회정치적인 변화와 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시장의 발달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자본-임노동관계는 노동시장의 형성을 의미하며, 이는 출신성분과 토대에 기초한 기존의 정치적 계층구조가 생산에서의 역할 및 소득에 따른 사회경제적 계층구조로 변화되는 단적인 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계층구조의 변화는 정치적인 영역에서 새로운 균열과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⁴¹

먼저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에 종사하면서 타인을 고용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전체적으로 조사대상자의 27.4%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사적 경제활동이 주된 수입원이었던 주민들 4명 중 한 명 이상은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사업을 진행했음을 의미한다. 2012년과 2013년을 비교하면 타인을 고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 종사 시 타인 고용 여부 단위: 명, %

구분	있다	없다	전체
2012년	25	75	100
	25.0	75.0	100.0
2013년	35	84	119
	29.4	70.6	100.0
전체	60	159	219
	27.4	72.6	100.0

타인을 고용한 경우 그 규모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5인 미만이 60.7%를 차지하여 사적 경제활동의 영세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이 5인 이상~10인 미만으로 17.9%를 차지하였다. 2012년과 2013년을 비교하면 5인 미만의 경우는 66.7%에서 57.1%로 9.6% 줄어든 대신 5인 이상~10인 미만의 경우는 9.5%에서 22.9%로 13.4% 증가하였다. 반면 10인 이상~15인 미만의 경우는 14.3%에서 8.6%로 5.7% 감소하였다.

〈표 48〉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 종사 시 타인 고용 규모 단위: 명, %

구분	5명 미만	5명 이상~10명 미만	10명 이상~15명 미만	15명 이상~20명 미만	20명 이상	전체
2012년	14	2	3	0	2	21
	66.7	9.5	14.3	0.0	9.5	100.0
2013년	20	8	3	0	4	35
	57.1	22.9	8.6	0.0	11.4	100.0
전체	34	10	6	0	6	56
	60.7	17.9	10.7	0.0	10.7	100.0

가장 많은 수입을 얻은 일거리에 종사하면서 타인을 고용한 기간을 보면 전체적으로 1년 미만이 대부분인 가운데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이 1개월 미만이다. 전체적으로 고용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84.6%를 차지한다. 그 가운데 6개월

41_장용석, "북한의 국가계급 균열과 갈등구조: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변화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2009), pp. 249~250.

이상~12개월 미만은 34.6%를 차지하였고 1개월 미만이 23.2%였다. 1년 이상은 15.4%였고 1개월 이상~3개월 미만이나 3개월 이상~6개월 미만은 모두 13.5%로 나타났다. 2012년과 2013년을 비교하면 1년 이상의 비중이 0.0%에서 23.5%로 크게 늘어난 특징을 보이고 있다. 대신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은 44.4%에서 29.4%로 15.0%나 줄어들었다. 이는 조사대상자가 제한적이어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지만 실제 사회적 경제활동에서 단속이나 경쟁 등으로 인한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할 수도 있다.

〈표 49〉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 종사시 타인 고용 기간 단위: 명.%

구분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년 이상	전체
2012년	4	3	3	8	0	18
	22.2	16.7	16.7	44.4	0.0	100.0
2013년	8	4	4	10	8	34
	23.5	11.8	11.8	29.4	23.5	100.0
전체	12	7	7	18	8	52
	23.1	13.5	13.5	34.6	15.4	100.0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별 종사기간에 따른 고용규모를 살펴보면 10명 미만이 70% 이상을 차지하여 사업의 규모가 지속기간과 무관하게 전반적으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1년 이상으로 보면,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 종사기간이 1년 이상~3년 미만인 경우 10명 이상~15명 미만의 고용이 25.0%이고, 종사기간이 3년 이상~5년 미만인 경우 20명 이상 고용 18.2%를 포함하여 10명 이상 고용이

27.3%이며 5년 이상의 경우도 10명 이상 고용이 22.2%인 점이 주목된다. 이는 낮은 비중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사업들이 지속성을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표 50〉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 종사기간 별 타인 고용 규모 단위: 명.%

구분	5명 미만	5명 이상 ~10명 미만	10명 이상 ~15명 미만	20명 이상	전체
6개월 미만	3	1	—	—	4
	75.0	25.0	—	—	100.0
6개월 이상 ~1년 미만	3	1	—	—	4
	75.0	25.0	—	—	100.0
1년 이상 ~3년 미만	4	2	2	—	8
	50.0	25.0	25.0	—	100.0
3년 이상 ~5년 미만	8	—	1	2	11
	72.7	—	9.1	18.2	100.0
5년 이상	15	6	2	4	27
	55.6	22.2	7.4	14.8	100.0

6) 북한 거주 시 상거래 대상에 대한 인식

북한이 개혁이나 체제전환을 거부하면서 소위 ‘우리식 사회주의’ 고수를 주장할 때 핵심적으로 내세우는 지표가 소유관계이다. 특히 경제관리 개선과 관련하여 “사회주의경제제도의 기초인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를 확고히 고수”하기 때문에 생산주체의 자율성을 증진하는

조치가 민영화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⁴² 이 때 사회주의적 소유의 근간은 국가 소유와 사회협동단체 소유이다.⁴³

그러나 소유권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생산수단에 대한 이용권과 이익 수취권, 처분권을 포함하고 있는 재산권의 측면에서 보면 생산수단에 대한 법적인 소유관계와 달리 다양한 변화들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재산권의 비공식적인 이행이 발생하면서 국가나 협동단체 소유의 생산수단이 사적 경제활동에 이용되거나 개인들이 생산수단을 마련하여 공장기업소 등에 등록한 다음 사적 경제활동에 등록한 생산수단을 활용하는 경우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개혁 또는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에서 핵심적인 요소인 생산수단의 상거래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인식을 통해 사유화 의식을 살펴보는 것은, 경제개혁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북한에 거주할 당시 가졌던 우선적인 상거래 대상 1순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생각해본 적이 없다는 응답은 전체적으로 3.6%에 불과하고, 2012년도와 2013년도 조사를 비교하면 6.8%에서 0.8%로 6.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우선적 상거래 대상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시장매대로서 전체 응답자의 34.4%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이 소토지로서 28.0%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살림집이 12.8%를 차지하였다. 2012년과 2013년 조사를 비교하면 개인이 운영하는 상점에 대한 상거래 응답이 4.3%에서 10.5%로 6.3% 증가한 점이 주목된다. 반면 협동농장 분조경작지에 대한 상거래 인식은 2012년 7.7%에서 2013년 3.8%로 3.9% 감소하였다.

〈표 51〉 우선적 상거래 대상에 대한 인식(1순위)

단위: 명.%

구분	소토지	살림집	시장매대	개인 운영 국가상점	농장 분조 경작지	소규모 지방 산업 공장	기업소 명의 개인 소유 화물차 발동선	생각해본 적이 없음	전체
2012년	33	14	38	5	9	2	8	8	117
	28.2	12.0	32.5	4.3	7.7	1.7	6.8	6.8	100.0
2013년	37	18	48	14	5	5	5	1	133
	27.8	13.5	36.1	10.5	3.8	3.8	3.8	0.8	100.0
전체	70	32	86	19	14	7	13	9	250
	28.0	12.8	34.4	7.6	5.6	2.8	5.2	3.6	100.0

북한에 거주할 당시 가졌던 우선적 상거래 대상 2순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살림집이 가장 큰 28.9%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이 시장매대, 개인이 운영하는 국가상점, 소토지 순으로 나타났다.

42 김지영,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조선신보』, 2013년 12월 24일.

43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헌법 20조에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고 규정하고 21조에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며,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22조에서 사회협동단체의 소유는 집단적 소유이며 사회협동단체는 토지, 농기계, 배, 중소공장, 기업소를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23조에서 국가는 점차 협동적 소유를 전인민적 소유 즉 국가소유로 전환시킨다고 명시하고 있다. 개인적 소유의 경우는 헌법 24조에서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의 소유로서 노동에 의한 사회주의 분배와 국가 및 사회의 추가적 혜택에 더해 터발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그 외 합법적인 경리를 통해 얻는 수입으로 규정하고 상속권도 법적으로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평양: 법률출판사, 2012), p. 18). 이는 물론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전통적으로 인정되었던 사회적(국가적) 소유, 협동적 소유 그리고 개인적 소유라는 세 가지 소유형태를 의미한다(Gertrude E. Schroeder, "Property Rights Issues in Economic Reforms in Socialist countries," *Studies in Comparative Communism*, Vol. 21, No. 2 (1988), pp. 176~177).

〈표 52〉 우선적 상거래 대상에 대한 인식(2순위)

단위: 명, %

구분	소토지	살림집	시장매대	개인 운영 국가 상점	농장 분조 경작지	소규모 지방 산업 공장	기업소 명의 개인 소유 화물차 발동선	생각해 본 적 없음	전체
2012년	16	28	13	14	8	10	13	4	106
	15.1	26.4	12.3	13.2	7.5	9.4	12.3	3.8	100.0
2013년	14	41	32	23	3	4	9	7	133
	10.5	30.8	24.1	17.3	2.3	3.0	6.8	5.3	100.0
전체	30	69	45	37	11	14	22	11	239
	12.6	28.9	18.8	15.5	4.6	5.9	9.2	4.6	100.0

이렇게 보면 북한 주민들의 우선적 상거래 대상에 대한 인식은 기본적으로 장사와 직접 관련된 시장매대나 개입부업경리인 소토지 그리고 살림집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2순위 인식에서 개인운영국가상점의 상거래에 대한 인식이 15.5%를 차지하여 사유화 대상 인식이 서비스부문의 소규모 사유화로 이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주목되지만, 협동농장소유의 분조경작지나 소규모 지방산업공장 등 농업이나 공업부문의 개혁과 관련된 생산부문에서의 사유화에 대한 인식은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학력에 따라 우선적 상거래 대상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면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층에서는 소토지와 시장매대

를 우선적인 상거래 대상으로 생각한 비율이 31.4%로 동일하게 높았다. 전문학교 학력을 가진 층에서는 시장매대가 29.7%로 가장 높았고 소토지와 살림집이 각각 27.0%와 16.2%로 그 뒤를 이었다. 고등중학교 학력을 가진 층에서도 시장매대가 36.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은 소토지로 25.4%를 차지하였다.

〈표 53〉 교육수준별 우선적 상거래 대상에 대한 인식(1순위)

단위: %

구분	소토지	살림집	시장매대	개인 운영 국가 상점	농장 분조 경작지	소규모 지방 산업 공장	기업소 명의 개인 소유 화물차 발동선	생각해 본 적 없음	전체
대학(교) 이상	11	3	11	2	3	1	1	3	35
	31.4	8.6	31.4	5.7	8.6	2.9	2.9	8.6	100.0
전문학교	10	6	11	4	1	2	1	2	37
	27.0	16.2	29.7	10.8	2.7	5.4	2.7	5.4	100.0
고등중학교	43	23	62	13	9	4	11	4	169
	25.4	13.6	36.7	7.7	5.3	2.4	6.5	2.4	100.0
인민학교	3	0	1	0	0	0	0	0	4
	75.0	0.0	25.0	0.0	0.0	0.0	0.0	0.0	100.0
무학	2	0	1	0	0	0	0	0	3
	66.7	0.0	33.3	0.0	0.0	0.0	0.0	0.0	100.0
전체	69	32	86	19	13	7	13	9	248
	27.8	12.9	34.7	7.7	5.2	2.8	5.2	3.6	100.0

마지막으로 직업에 따른 우선적 상거래 대상 인식을 살펴보면 노동자들의 경우 시장매대와 소토지에 대한 우선적 상거래 대상 인식이 각각 36.8%와 29.9%로 높게 나타난 반면 소규모 지방산업 공장과 같은 생산 시설에 대한 인식은 1.1%로 낮게 나타났다. 농민의 경우도 시장매대에 대한 우선적 상거래 대상 인식이 38.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23.1%를 차지한 소토지였다. 반면 협동농장 분조경작지에 대한 상거래 대상 인식은 7.7%로 낮게 나타났다. 사무원의 경우도 시장매대에 대한 상거래 대상 인식이 36.8%로 가장 높았고 소토지에 대한 인식이 21.1%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사무원의 경우 다른 직업군과 달리 협동농장 분조경작지에 대한 우선적 상거래 대상 인식이 15.8%를 차지한 점이 주목된다. 전문가들의 경우는 개인운영 국가상점에 대한 상거래 대상 인식이 25.0%로 가장 높았고 소토지가 20.0%로 그 다음을 이었다. 한편 가정부인의 경우는 시장매대와 소토지에 대한 우선적 상거래 대상 인식이 34.3%로 동일하게 가장 높았고 장사의 경우 시장매대가 51.6%로 가장 높은 가운데 소토지에 대한 상거래 대상 인식이 19.4%로 그 뒤를 이었다.

〈표 54〉 직업별 우선적 상거래 대상에 대한 인식(1순위)

단위: 명, %

구분	소토지	살림집	시장매대	개인운영 국가상점	농장분조경작지	소규모 지방산업공장	기업소명의 개인소유 화물차 발동선	생각해본적 없음	전체
노동자	26	12	32	5	3	1	6	2	87
	29.9	13.8	36.8	5.7	3.4	1.1	6.9	2.3	100.0
농민	3	2	5	0	1	1	0	1	13
	23.1	15.4	38.5	0.0	7.7	7.7	0.0	7.7	100.0
사무원	4	2	7	2	3	0	1	0	19
	21.1	10.5	36.8	10.5	15.8	0.0	5.3	0.0	100.0
전문가	4	3	3	5	2	2	0	1	20
	20.0	15.0	15.0	25.0	10.0	10.0	0.0	5.0	100.0
학생	7	2	1	2	1	2	1	0	16
	43.8	12.5	6.3	12.5	6.3	12.5	6.3	0.0	100.0
군인	4	2	2	1	1	0	0	1	11
	36.4	18.2	18.2	9.1	9.1	0.0	0.0	9.1	100.0
외화별이	2	1	1	0	0	0	1	1	6
	33.3	16.7	16.7	0.0	0.0	0.0	16.7	16.7	100.0
장사	6	5	16	2	1	0	1	0	31
	19.4	16.1	51.6	6.5	3.2	0.0	3.2	0.0	100.0
가정부인	12	3	12	2	2	1	2	1	35
	34.3	8.6	34.3	5.7	5.7	2.9	5.7	2.9	100.0
무직·기타	1	0	6	0	0	0	1	2	10
	10.0	0.0	60.0	0.0	0.0	0.0	10.0	20.0	100.0

3. 소득의 분화

북한에서 1990년대 중반 경제위기가 발생하기 이전, 계획경제체계가 작동하고 있을 당시 주민들 간의 소득 격차는 크지 않았다. 공식적인 임금이 주민소득의 핵심적인 요소였기 때문이다. 1992년을 기준으로 보면, 여관, 식당, 이발소 등 편의봉사부문의 최하위 임금인 70원과 당 부장이나 내각 상의 최고위 임금인 500원은 7.1배 정도의 격차를 보였다. 당과 국가기관, 공장기업소의 간부진을 제외한 일반 주민들의 경우를 살펴 보면, 280원을 받는 농민과 70원을 받는 편의봉사부문의 근로자 간에 소득격차는 4배 정도였다.

〈표 55〉 북한의 직종별 보수 및 소득수준(1992년 기준) 단위: (북한)원

구분	직 책	임금 또는 소득
당·정기관 근로인텔리	당부장, 내각상	430~500
	내각부상, 도인민위원장	360~430
	도인민위 부위원장, 군인민위원장	240~290
	사무원	85~100
공장·기업소 근로인텔리	특급기업소 지배인	360~430
	1-2급 기업소 지배인, 기사장	220~290
노동자	광부, 제철·제련공	130~140
	일반기계공, 운전기사	110~115
	일반노동자	100~115
농민	협동농장농민	250~280
교육·문화 인텔리 및 서비스 사무원	대학교수	250~300
	의사(1급 의료원)	250
	일반교원	90~120
	여관, 식당, 이발소, 상점 등	70~115

* 김병로 외, 『북한사회의 불평등 구조와 정치사회적 함의』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8), p.46에서 재인용.

이런 가운데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나⁴⁴ 최근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추진되고 있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연구, 완성을 위한 실험적 개혁조치가 실시되면서 임금이 전반적으로, 부문이나 기업간에 불균등하게 상승하였고, 공식적인 임금 기준으로도 주민들 간의 소득 격차는 이전보다 확대되었다. 특히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경제관리방법 개선을 위한 조치에 따라 기업소가 자체 몫에서 임금을 결정할 수 있게 되면서, 기업 간 임금격차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 간의 소득격차를 확대시킨 핵심 요소는 사적 경제활동에 따른 비공식 소득의 편차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계획경제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었고 대신 주민들의 자구적인 사적 경제활동과 시장의 역할이 증가하면서, 소득 격차는 경제위기 이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공식적인 임금체계나 수준이 유명 무실해지면서 사적 경제활동에 따른 비공식수입이 가계수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득격차는 출신성분에 따른 정치적 계층질서를 사적 경제활동에 바탕을 둔 사회경제적 계층질서로 변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북한주민들의 소득격차와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계층질서가 어떻게 태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소득격차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것은 북한 체제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44. 7.1경제관리개선 조치와 관련해서는 조선로동당출판사, 『가격과 생활비를 전반적으로 개정한 국가적 조치를 잘 알고, 강성대국 건설을 힘있게 앞당기자, 『KDI 북한경제리뷰』, 2003년 1월호 참조.

1) 가구수입

먼저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월평균 가구생활비를 살펴보면 가장 주목되는 것은 공식적인 생활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응답이 전체적으로 42.3%에 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공식적인 경제부문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음을 재확인해주는 것이다. 북한이 2009년 11월말 화폐개혁을 단행하여 화폐의 액면가를 1/100로 절하하면서도 공식적인 임금 체계는 여전히 2,000~4,000원대를 유지하였음을 감안하면 가구소득이 10만원 이상인 가구가 4.6%를 차지한 점도 주목된다. 이는 2000년대 이후 김정은 정권에 이르기까지 독립채산제의 강화 등 각종 경제관리개선 조치들이 누적된 결과일 수 있다.⁴⁵

〈표 56〉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월평균 가구생활비 총합 단위: 명.%

구분	0원	1천원 미만	1천원 이상~3천원 미만	3천원 이상~5천원 미만	5천원 이상~1만원 미만	1만원 이상~5만원 미만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15만원 미만	15만원 이상~15만원 이상	전체
2012년	41	3	23	16	8	9	5	2	3	110
	37.3	2.7	20.9	14.5	7.3	8.2	4.5	1.8	2.7	100.0
2013년	60	2	38	14	6	2	1	2	4	129
	46.5	1.6	29.5	10.9	4.7	1.6	0.8	1.6	3.1	100.0
전체	101	5	61	30	14	11	6	4	7	239
	42.3	2.1	25.5	12.6	5.9	4.6	2.5	1.7	2.9	100.0

다음으로 장사나 부업을 통해 번 월평균 가구수입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10만원 이상~30만원 미만의 소득을 번 가구가 29.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1만원 이상~10만원 미만과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이 모두 15.0%를 차지하였다. 한편 하나도 벌지 못한 가구가 16.4%를 차지한 반면 100만원 이상을 번 가구도 가구도 7.5%나 되었다. 앞에서 의식주 생활을 기준으로 중간층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던 1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의 소득 구간은 56.3%였고, 하층일 수 있는 10만원 미만의 경우는 36.1%, 상층일 수 있는 100만원 이상은 7.5%를 차지하였다.

〈표 57〉 장사나 부업을 통해 번 월평균 가구수입 총합 단위: 명.%

구분	0원	1만원 미만	1만원 이상~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전체
2012년	19	6	16	32	9	11	3	96
	19.8	6.3	16.7	33.3	9.4	11.5	3.1	100.0
2013년	16	4	16	30	17	21	13	117
	13.7	3.4	13.7	25.6	14.5	17.9	11.1	100.0
전체	35	10	32	62	26	32	16	213
	16.4	4.7	15.0	29.1	12.2	15.0	7.5	100.0

45. 이와 관련 북한에서는 생산정상화를 위한 경제관리개선조치의 일환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실적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국가기준 생활비의 수십배에서 최고 100배 이상의 월급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리태호, "경제관리개선/조치실시 1년, 생산현장의 변화," 『조선신보』, 2014년 4월 2일).

2) 생활수준에 대한 인식

북한에 거주할 당시 생활수준에 대한 시기별 인식을 살펴보면 1990년대 중후반 이후 2010년까지는 상층과 하층이라고 인식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중층이라고 인식한 비중이 늘어나다가, 2011~2012년 기간에는 중층이라고 인식한 층이 약간 줄어든 대신 하층이라고 인식한 비중이 약간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5~2010년 기간에 대한 조사가 2013년에만 이루어졌음을 감안하여 이 기간의 인식을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상층과 하층의 비중이 줄고 중층의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4~1999년 기간과 탈북 직전이었던 2011~2012년 기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층이라는 인식은 11.5%에서 6.2%로 5.3% 감소하였고, 하층이라는 인식도 45.1%에서 33.1%로 12.0% 감소하였다. 반면 중층이라는 인식은 43.5%에서 60.7%로 17.2% 증가하였다. 상층이라는 인식의 감소 폭보다 하층이라는 인식의 감소 폭과 중층이라는 인식의 증가 폭이 2~3배 정도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소득수준의 불평등이 완화되는 경향을 보여준다고 보아도, 1990년대 중후반 경제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당시와 비교했을 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제한적이거나 경제가 성장하고 사적 경제활동도 활성화되면서 주민들이 극단적인 생존의 위기에서 벗어난 결과일 수 있다.

〈표 58〉 생활수준에 대한 시기별 인식

단위: 명, %

구분	상층	중층	하층	전체
1994~1999년	29	110	114	253
	11.5	43.5	45.1	100.0
2000~2004년	16	134	105	255
	6.3	52.5	41.2	100.0
2005~2010년	8	87	37	132
	6.1	65.9	28.0	100.0
2011~2012년	16	156	85	257
	6.2	60.7	33.1	100.0

* 2005~2010년 기간에 대해서는 2013년에만 조사

탈북 직전 생활수준에 대한 인식에 따라 실제 소득은 어떤 차이를 보였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탈북 직전 생활수준에 대한 인식과 장사를 통해 벌어들인 월평균 가구 수입의 총합을 교차분석해 보면, 상층의 경우는 50.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소득 구간이 100만원 이상으로 나타난다. 중층의 경우는 31.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소득 구간이 10만원 이상~30만원 미만이며 하층의 경우는 25.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소득 구간이 1만원 이상~10만원 미만이다. 따라서 각 생활수준별 응답에서 절반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소득 구간을 기준으로 구분해보면 상층은 50.0%를 차지한 100만원 이상 구간, 하층은 62.7%를 차지한 10만원 미만 구간이 각각 해당되며 중층은 상층과 하층 구간을 제외하고 58.5%를 차지한 1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구간으로 볼 수 있다.

〈표 59〉 탈북직전 생활수준 인식별 장사나 부업을 통해 번 월평균 가구수입 총합

단위: 명.%

구분	0원	1만원 미만	1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전체
상층	0	0	1	1	3	2	7	14
	0.0	0.0	7.1	7.1	21.4	14.3	50.0	100.0
중층	16	8	13	45	20	18	22	142
	11.3	5.6	9.2	31.7	14.1	12.7	15.5	100.0
하층	17	11	19	18	5	3	2	75
	22.7	14.7	25.3	24.0	6.7	4.0	2.7	100.0

그러나 이는 생활수준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소득 구간을 살펴본 것이기에 같은 소득 구간에 있으면서도 상층이나 중층, 하층으로 나누어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일례로 10만원 이상~30만원 미만 정도의 소득을 지닌 응답자 64명 중에서 상층이라는 응답이 1명, 중층이라는 응답이 45명인 반면 하층이라는 응답도 18명이나 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다소나마 보완하는 방식으로 소득 격차를 파악하기 위해 2012년과 2013년 조사의 유효한 응답자 전체를 대략 5분위로 구분하여 해당 층의 소득을 살펴보면 최상층의 경우 50만원 이상이고, 중상층은 20만원 이상~50만원 미만, 중층은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 중하층은 5천원 이상~10만원 미만, 최하층은 5천원 미만으로 추정해 볼 수도 있다.⁴⁶

〈표 60〉 장사나 부업을 통해 번 월평균 가구수입의 5분위 격차

단위: 명.%

소득	5천원 미만	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전체
빈도	41	36	49	39	48	213
비율	19.2	16.9	23.0	18.3	22.5	100.0

장사는 직업과 못사는 직업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는 것은 북한에서 사회경제적 계층 분화가 기존의 정치적 계층질서를 얼마나 변화시키고 있는가와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기존의 정치적 계층질서를 바탕으로 한 직업 간 위계질서 속에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신흥부유층의 위상을 간접적으로나마 가늠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가장 잘사는 직업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중앙당 간부라는 인식이 45.4%로 가장 높다. 그 다음은 법기관 간부로 33.7%를 차지하였다. 중간 정도 사는 직업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외화벌이라는 인식이 22.8%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17.3%를 차지한 지방당 간부였으며 인민위원회 간부가 13.6%로 그 뒤를 이었다. 마지막으로 가장 못사는 직업의 경우 농장원이라는 인식이 47.4%로 가장 높고 공장·기업소 노동자라는 인식이 31.5%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그 외에 중간 정도 잘사는 직업에서 시장 상인과 공장, 기업소 간부를 비교하면 시장 상인이 11.6%로 공장, 기업소 간부의 6.9%보다 조금 높았다. 또한 선군정치를 표방하고

46. 장사 등을 통한 월평균 가구 소득 총합이 얼마 정도되었는지를 개방형으로 묻고, 조사대상자들의 응답이 대체로 5만원 단위임을 감안하여, 1만원 미만은 5천원 단위로, 1만원 이상부터는 5만원 단위로 유효한 응답을 분류하여 정리한 다음, 최대한 20%에 근접하게 5분위로 나누는 방식으로 추정하였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관의 경우 가장 못산다는 인식이 6.2%로, 0.6%인 가장 잘산다는 인식이나 4.1%인 중간 정도 잘산다는 인식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61〉 잘사는 직업에 대한 인식 단위: %

구분	중앙당 간부	지방당 간부	법기관 간부	인민위원회 간부	전문직	외화벌이
가장 잘사는 직업	45.4	7.4	33.7	1.0	0.0	9.2
중간 정도 잘사는 직업	1.6	17.3	14.6	13.6	4.9	22.8
가장 못사는 직업	0.6	1.7	0.4	0.4	0.2	0.0
가장 못사는 직업	0.0	0.2	0.0	1.8	3.2	0.4
구분	군관	시장 상인	공장·기업소 간부	공장·기업소 노동자	농장 관리 일꾼	농장원
가장 잘사는 직업	0.6	1.7	0.4	0.4	0.2	0.0
중간 정도 잘사는 직업	4.1	11.6	6.9	0.0	2.4	0.2
가장 못사는 직업	6.2	1.6	1.0	31.5	6.7	47.4

이렇게 보면 북한에서 가장 잘사는 직업은 중앙당 간부와 법기관 간부들이고, 중간 정도 잘사는 직업은 외화벌이 일꾼, 지방당 간부와 인민위원회 간부들이며, 농민과 노동자들이 가장 못사는 직업으로 인식되는 가운데, 시장 상인이나 공장·기업소 간부들은 중간 정도 잘사는 직업과 가장 못사는 직업의 중간 정도로 인식되고 있을 가능성이 주목된다. 이는 사적 경제활동, 특히 시장을 매개로 한 경제활동을 통해 신층부유층

이 등장하고 있으나 여전히 정치권력을 매개로 한 정치적 계층질서가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 상인 등에 비해 동원 가능한 자본의 규모가 클 수 있는 외화벌이 정도가 중간 정도 잘사는 층으로 상승하고 있는 형태로 사회경제적 계층질서가 형성되어 가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상대적인 계층 인식과 관련하여 북한에 거주할 당시 자신의 생활수준을 친척과 비교한 경우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훨씬 또는 약간 상위에 있다는 인식이 39.2%, 비슷하다는 인식이 31.4%로 나타나 비슷하거나 상위에 있다는 인식이 70.6%를 차지하였다. 반면 약간 또는 훨씬 하위에 있다는 인식이 29.4%로 나타났다. 2012년과 2013년 조사를 비교하면 양극단의 훨씬 상위나 훨씬 하위라는 인식이 각각 2.2%와 3.1% 줄어들고 비슷하다는 인식이 5.8% 줄어든 반면 약간 상위 또는 약간 하위라는 인식은 각각 5.2%와 5.9% 늘어났다.

〈표 62〉 친척과의 생활수준 비교 단위: 명, %

구분	훨씬 상위	약간 상위	약간 하위	훨씬 하위	비슷	전체
2012년	15	32	18	17	43	125
	12.0	25.6	14.4	13.6	34.4	100.0
2013년	13	41	27	14	38	133
	9.8	30.8	20.3	10.5	28.6	100.0
전체	28	73	45	31	81	258
	10.9	28.3	17.4	12.0	31.4	100.0

북한에 거주할 당시 자신의 생활수준을 이웃과 비교한 인식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훨씬 또는 약간 상위에 있다는 인식이 43.7%, 비슷하다

는 인식이 30.9%로서 상위에 있거나 비슷하다는 인식이 74.6%를 차지하였다. 이는 친척과 비교한 경우보다 4.0% 높다. 반면 약간 또는 훨씬 하위에 있다는 인식은 25.5%로 나타났다. 2012년과 2013년을 비교하면 약간 상위에 있다는 응답이 5.1% 늘어난 반면 비슷하다는 인식은 3.2% 줄어 들었다.

〈표 63〉 이웃과의 생활수준 비교

단위: 명.%

구분	훨씬 상위	약간 상위	약간 하위	훨씬 하위	비슷	전체
2012년	12	40	17	16	41	126
	9.5	31.7	13.5	12.7	32.5	100.0
2013년	12	49	18	15	39	133
	9.0	36.8	13.5	11.3	29.3	100.0
전체	24	89	35	31	80	259
	9.3	34.4	13.5	12.0	30.9	100.0

이렇게 보면 친척이나 이웃과 비교했을 때 자신의 생활수준이 비슷하거나 높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70%를 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다수 탈북자들의 북한 거주 시 생활수준이 일반주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지 않았고 이웃이나 친척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도 적었을 가능성이 주목된다.

3) 경제적 계층 분화 이유에 대한 인식

경제적 계층 분화의 이유에 대한 인식도 정치적 계층질서가 사회경제적인 계층질서로 전환되어 가는 정도를 보여주는 주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잘살고 못사는 것이 정치적인 이유 탓이라고 인식되고 있다면 정

치적 계층질서가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 거주할 당시 경제적 계층분화의 이유로 인식한 1순위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본인 직위의 높고 낮음이 38.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정치사상성의 차이가 27.7%를 차지하고 권력층과의 안면관계도 17.2%로 3위를 차지하였다. 여기에도 출신성분의 차이라는 응답이 10.5%를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정치적인 이유가 경제적 계층분화의 이유라고 인식하는 비중은 94.1%에 달한다. 이에 비해 경제적 계층분화의 이유가 개인의 성격이나 자기노력의 차이라는 인식은 4.3%이며, 교육수준의 차이는 0.4%에 불과하다. 2012년과 2013년 조사를 비교하면 정치사상성과 출신성분 비중이 각각 8.0%와 7.8% 증가한 반면, 본인 직위 고하는 13.2% 감소한 점이 주목된다. 이는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세대교체를 포함해 새로운 엘리트들이 충원되는 과정에서 능력도 중요하지만 대체로 정치사상성이나 출신성분이 강조되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64〉 경제적 계층분화 이유에 대한 인식(1순위)

단위: 명.%

구분	정치 사상성	본인 직위	교육 수준	가족 (친척) 관계	권력층 안면관계	개인 성격 노력	출신 성분	전체
2012년	29	56	1	2	20	7	8	123
	23.6	45.5	0.8	1.6	16.3	5.7	6.5	100.0
2013년	42	43	0	1	24	4	19	133
	31.6	32.3	0.0	0.8	18.0	3.0	14.3	100.0
전체	71	99	1	3	44	11	27	256
	27.7	38.7	0.4	1.2	17.2	4.3	10.5	100.0

북한에 거주할 당시 경제적 계층분화의 이유로 인식한 2순위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권력층과의 안면관계가 38.7%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본인 직위의 높고 낮음이 23.8%를 차지하였으며 출신성분 차이도 16.0%를 차지하였다. 개인의 성격이나 노력의 차이는 8.2%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1순위의 4.3%보다는 3.9% 높지만, 여전히 낮은 비중이다. 교육의 경우도 1순위의 0.4%보다 수치는 높지만 사실상 비슷한 수준인 2.0%를 차지하여 교육수준은 경제적 계층분화와 큰 상관이 없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북한에서 경제적 계층분화가 여전히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보다는 정치적 권력관계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인식이자, 실제 북한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표 65〉 경제적 계층분화 이유에 대한 인식(2순위) 단위: 명.%

구분	정치 사상성	본인 직위	교육 수준	가족 (친척) 관계	권력층 안면 관계	사는 지역	개인 성격 노력	출신 성분	운수 (팔자)	전체
2012	3	28	2	3	47	4	13	22	1	123
	2.4	22.8	1.6	2.4	38.2	3.3	10.6	17.9	0.8	100.0
2013	4	33	3	5	52	8	8	19	1	133
	3.0	24.8	2.3	3.8	39.1	6.0	6.0	14.3	0.8	100.0
전체	7	61	5	8	99	12	21	41	2	256
	2.7	23.8	2.0	3.1	38.7	4.7	8.2	16.0	0.8	100.0

이렇게 본다면 계층분화에 대한 이유로 본인 직위의 높고 낮음이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고 그 다음으로 비공식적인 연결망자원인 권력층과의 안면관계가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권력층과의 안면관계라는 인식은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적 경제활동의 성격을 보여주기도 하다. 즉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적 경제활동이 개별가구가 지닌 비공식적인 인적 네트워크-다양한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권력층과의 유착관계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⁴⁷

정치적인 요인(본인직위, 권력층과의 안면관계, 정치사상성, 출신성분)과 개인적인 요인(교육수준, 개인성격, 노력)으로 대별해서 본다면 권력층과의 안면관계를 포함한 정치적인 요인이 1순위에서 94.1%를 차지하였고 2순위에서도 81.2%를 차지하여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개인적인 성격이나 노력과 교육수준은 1순위와 2순위에서 각각 4.7%와 10.2%를 차지하여 매우 낮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는 북한에서 개인적인 능력이나 노력보다 정치적 요소가 계층분화의 핵심적인 요인으로 여전히 작용하고 있으며 기존의 정치적 계층질서에 대비되는 사회경제적 계층질서가 아직은 매우 미약한 수준에서 형성되어 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에 거주할 당시 일상의 고민거리를 살펴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돈벌이이고 돈벌이와 관련될 수 있는 각종 단속 문제가 그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출세나 조직생활은 매우 작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먼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돈벌이가 54.3%로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단속은 26.8%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조직생활은

47_ 최봉대, "1990년대 말 이후 북한 도시 사적 부문의 시장화와 도시가구의 경제적 계층분화: 개별가구의 비공식적 연결망자원의 계층화 매개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제11권 2호 (2008) 참조.

6.7%, 출세는 3.5%에 불과하다. 이는 북한 내에서 배급주의 가치관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자 당생활총화 등을 통한 조직사상적 통제가 상당히 이완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2012년과 2013년 조사를 비교하면 돈벌이라는 응답은 59.5%에서 49.6%로 9.9% 감소한 반면, 단속이라는 응답은 23.1%에서 30.1%로 7.0% 증가하였다. 이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권력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 법규범과 질서확립을 명분으로 시장경제활동에 대한 규제를 비롯해 소위 비사회주의 현상에 대한 각종 검열과 통제를 강화한 결과,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각종 단속에 의한 폐해가 커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표 66〉 일상적인 고민 거리 단위: 명, %

구분	돈벌이	뇌물 제공	각종 단속	조직 생활	출세	자녀 교육	기타	전체
2012년	72	1	28	8	3	6	3	121
	59.5	0.8	23.1	6.6	2.5	5.0	2.5	100.0
2013년	66	5	40	9	6	4	3	133
	49.6	3.8	30.1	6.8	4.5	3.0	2.3	100.0
전체	138	6	68	17	9	10	6	254
	54.3	2.4	26.8	6.7	3.5	3.9	2.4	100.0

4. 평가와 시사점

북한에서 사적인 경제활동이 확산되고 있는 점은 충분히 주목되어야 하지만 그 한계에 대해서도 주의가 기울여져야 한다. 우선 북한 내에서 시장을 매개로 한 사적 경제활동은 매우 활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대상자의 70% 이상이 장사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당원의 경우도 약 70% 가까이 장사경험을 갖고 있었다. 이는 북한 주민들이 장사와 같은 사적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는 살아가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따라서 당국도 사적 경제활동에 대한 단속이나 통제 일변도의 억제정책에서 벗어나 이를 묵인하거나 부분적이거나 제도화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인 경제관리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내에서 시장을 매개로 한 사적인 경제활동이 비록 양적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그 성격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이것은 사적 경제활동이 소매장사나 되거리장사와 같은 유통부문에 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타인을 고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도 30%에 미치지 못하고, 고용규모는 5인 미만이 60%에 달한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이는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 종사기간에 따른 고용규모에서도 확인된다. 대체로 사업지속 기간과 무관하게 고용규모는 10명 미만이 7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일부 부유층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경제활동이 대체적으로 생산보다는 유통부문을 중심으로, 영세한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북한의 개혁이나 체제전환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생산수단 사유화에 대한 인식도 주목할 만한 변화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우선적 상거래 대상

에 대한 인식은 시장매대나 소토지, 살림집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협동농장 분조경작지를 상업적으로 거래할 수 있어야 한다는 농지 사유화 및 관련된 농업 개혁 인식이나 소규모 지방산업 공장의 생산설비도 상업적 거래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산업설비 사유화 인식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에서 시장을 매개로 한 사적인 경제활동이 양적인 측면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발전하기 위해서는 당국 차원에서 이러한 경제활동을 합법화하고 제도화하는 개혁조치가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강구되어야 하겠지만, 특히 중요한 부문이 금융개혁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수입원이었던 사적 경제활동에 중사하면서 부딪혔던 애로사항에는 단속이나 뇌물 제공 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열악한 전기나 교통사정과 같은 인프라의 문제도 있었지만 사업자금마련 문제가 매우 컸던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북한에서 시장을 매개로 한 경제활동이 질적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융개혁이 이루어져야 하고, 상업은행의 설립과 같은 금융개혁은 북한경제개혁의 핵심적인 지표 중 하나로 평가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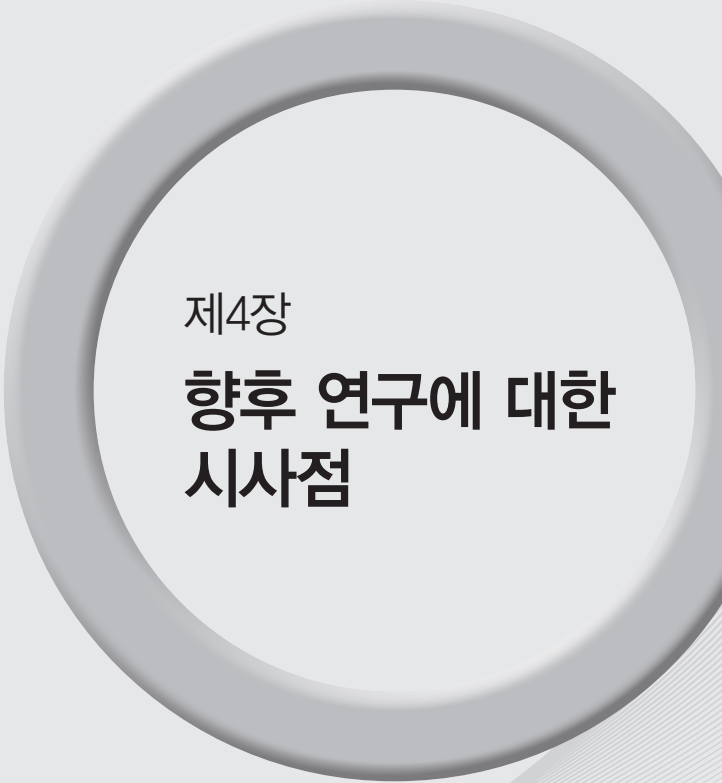
북한에서 시장을 매개로 한 경제활동이 비록 질적으로는 여러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양적으로는 확산되면서, 이러한 경제활동으로 인해 주민들 간의 소득분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독립채산제 강화의 틀 안에서 기업의 자율성 증진을 지향하는 경제관리개선조치들이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국가로부터 지급 받는 공식적인 생활비(임금)가 경제부문 간, 공장기업소 간에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무엇보다 사적인 경제활동은 1990년대 경제위기 이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큰 소득격차를 발생시키고 있다. 5분위 기준으로

최하층의 월평균 가구 소득이 5천원 미만인 반면 최상위층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50만원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소득분화는 시장화의 진전에 따른 자본-임노동 관계의 등장과 함께 새로운 사회경제적 계층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런 점에서 출신성분이나 토대에 기초한 정치적 계층질서가 변화의 계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 내에서 잘 사는 직업이나 경제적 계층분화 이유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정치적인 위계질서에 기초한 계층구조가 여전히 공고하게 자리잡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는 외화벌이와 같이 경제적으로 부를 축적한 층이 중간 정도 잘 사는 것으로 인식되는 반면, 가장 잘 사는 직업은 중앙당 간부이며 중간 정도 잘 사는 직업도 지방당 간부나 법기관 간부라는 인식에서 확인된다. 또한 경제적 계층분화의 이유에 대한 인식에서도 개인의 성격이나 노력, 교육수준보다는 본인 직위의 높고 낮음이나 정치사상성의 차이에 더해 권력층과의 안면관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사적인 경제활동을 통한 부의 축적도 개인의 능력보다는 정치적인 요인들, 특히 각종 네트워크나 뇌물 등을 활용한 권력과의 유착관계가 있어야 가능한 현실을 보여준다.

따라서 북한에서 시장을 매개로 한 사적 경제활동이 확산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시장화의 진전과 주민소득의 분화, 그로 인한 사회적 질서의 변화와 중장기적인 정치적 변화 가능성들이 충분히 주목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그러한 변화가 질적인 도약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원인들도 주목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평가하고 전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제4장
**향후 연구에 대한
시사점**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제4장

향후 연구에 대한 시사점

북한 사회의 변화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지난 수십년간 구축한 계획경제의 틀이 공식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북한 정권도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완성'이라는 이름으로 경제관리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소위 우리식 사회주의와 국가적 소유를 여전히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식적이고 제도적인 영역에서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더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계획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한 결과 실제 주민들의 생활에서는 다양한 사적 경제 활동의 활성화와 소득격차의 심화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재 북한의 면모를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추적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이번 북한사회변동조사는 최근 북한 사회가 변화고 있는 모습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선 북한 사회에 대한 기존의 조사들이 대부분 소수의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비해,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양적 조사 방법을 채택하였다. 물론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다른 조사와 마찬가지로 이 연구 또한 조사대상의 수

나 지역적인 편중이 조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이번 조사의 결과를 북한사회 전반에 대한 조사로 확대하는 데는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들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축적된다면 상대적으로 조사대상의 한계에서 비롯되는 문제들을 극복할 가능성 또한 높아지리라 기대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또한 최근 북한에서 이탈한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시계열적으로 비교분석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조사시점의 직전 연도에 탈북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2년에 걸쳐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런 점에서 이번 조사는 최근 북한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시도이며, 특히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상황을 살펴보는 데 유용할 것이다.

조사결과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진단하였다. 먼저 북한 주민들의 실생활을 살펴보기 위해 북한주민들의 의식주 변화를 추적하였고, 그 다음으로 북한의 개혁개방과 밀접하게 연관된 시장화 현상과 함께 그로 인한 주민들의 소득분화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북한주민들의 기초생활상의 변화, 그 바탕에 놓인 사적 시장경제활동의 확산 그리고 그로 인한 소득분화와 사회계층구조의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추적하고자 하였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주민들의 생활을 보면 전반적으로 식사횟수 자체는 증가한 반면 실제 주식의 구성이나 특히 단백질 섭취 등에서는 소득수준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며, 주택시장도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월 가구평균 비공식 소득이 100만원 안팎인 상층의 경우 거의 입쌀로 구성된 하루 세끼 식사가 가능했고 고기도 매

일 또는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는 섭취하였으며 계절마다 한 두벌의 옷을 구입하고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가구평균 비공식 소득이 1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에 해당하는 중층의 경우는 세끼 식사가 가능했으나 입쌀과 강냉이를 반반 섞어 먹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였고 고기는 일주일에 한 두 번 또는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섭취하며 계절마다 또는 일년에 한두벌의 옷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층의 경우 살림집은 연립주택이나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월 가구평균 비공식 소득이 10만원 미만인 하층의 경우는 하루 세끼 또는 최소한 두끼 정도의 식사는 가능하지만 강냉이의 비중이 70%를 넘거나 거의 강냉이로 된 식사를 하였고 고기도 일년에 한 두 번 정도 섭취하였으며 옷을 일년 또는 몇년에 한 두벌 정도 구입하였고 대체로 연립주택에 거주하였다. 주택의 경우 소득이 높을 수록 직접 집을 짓는 경우가 많았고 소득이 낮을 수록 국가가 배정해 준 집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들 간에 집을 사고 파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지역별 생활수준을 보면 부의 편중이 심화되고 굳어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상대적으로 시장이 발달하고 상품의 유입이 활발한 지역일수록 경제적인 부가 집중되는 반면 도시보다는 농촌,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국경지역에서 멀리 떨어졌거나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지역일수록 빈곤한 경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광역단위의 경우 평양을 끼고 있는 평안남도 가장 잘 살고 그 다음이 중국,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함경북도였으며 가장 못사는 지역은 내륙인 강원도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단위로는 라선시나 신의주시, 평성시를

가장 잘사는 도시로 인식한 반면 사리원이나 원산 등을 가장 못사는 도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북한경제의 시장화와 주민들의 소득분화를 살펴보면 사적인 경제활동이 매우 활발하고 그에 따른 소득격차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가운데 시장을 활용한 사적인 경제활동 경험을 지닌 비율이 70% 정도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장을 매개로 한 경제활동의 수준이나 폭은 개인별로 상당한 편차가 있겠지만, 이는 양적인 측면에서 시장경제활동이 크게 확산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주민들의 소득분화가 진행되면서 최상층과 최하층 간의 소득격차도 매우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분위 소득 기준으로 최하층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5천원 미만인 반면 최상층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50만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사적경제활동의 성격이나 수준, 소득격차 등에 따라 북한 내에서, 기존의 정치적 계층질서와는 다른, 새로운 사회경제적 계층질서가 등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이러한 사적경제활동의 활성화나 소득분화에 따른 사회적 계층질서 변화가 지닌 제한적 성격도 간과되지 말아야 한다. 우선 사적경제활동이 유통부문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고용규모도 매우 영세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사유화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도 생산수단에 대한 소규모 사유화로조차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시장을 매개로 한 사적경제활동의 활성화에 주목해야 하지만 동시에 그 한계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 시장을 매개로 한 사적경제활동이 유통부문과 영세성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물론 제도적인 측면에서 사적경제활동을

합법화 및 제도화하지 못하고 있는 경제개혁의 한계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에서 시장을 매개로 한 사적경제활동의 증가는 경제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계획경제가 무너진 공간에서 사적경제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새로운 경제성장의 계기를 확보하고 그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적경제활동이 안정성과 지속성, 확대발전의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북한이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연구 및 완성을 얘기하면서 개혁조치에 대한 실험을 지속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현실적 수요’를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조사는 사적경제활동의 지속적인 확대발전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가 금융개혁임도 보여주고 있다. 사적 경제활동에 종사하면서 부딪혔던 가장 큰 애로사항이 바로 사업자금마련이었던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이다.

동시에 부패문제도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에 종사하면서 가장 컸던 애로사항으로 조사대상자의 59.6%가 단속과 뇌물제공을 지적하였다. 특히 조사대상자의 88.1%가 뇌물을 제공하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북한에서 뇌물제공과 같은 부패가 만연한 것은 일차적으로 경제위기로 인한 국가재정의 부족이나 위기 문제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으나 사회경제적 전환과정에서 제도적 미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측면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패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시장경제활동에 법적 안정성을 부여하고 사회경제적 투명성도 제고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개혁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소득에 따른 경제적 계층분화의 경우도 다소 신중하게 해석해야 한다. 시장을 매개로 한 사적경제활동이 자본-임노동관계로까지 발전하

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나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여전히 사적경제활동으로 부를 축적한 집단보다는 중앙당이나 지방당 간부, 법기관이나 인민위원회 간부들을 잘사는 직업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적 계층분화의 이유로도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보다는 본인 직위의 높고 낮음이나 정치사상성의 차이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특히 사적경제활동과 관련해서도 권력층과의 네트워크 및 안면관계를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북한 내에서 시장을 매개로 한 사적경제활동을 통해 새로운 부유층이 등장하고 있지만 기존의 정치적 위계질서에 따른 계층구조가 상대적으로 공고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사적인 경제활동조차도 정치적 질서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제까지 살펴본 북한 주민들의 기초생활이나 북한경제의 시장화와 그에 따른 주민들의 소득분화는 체계적이면서도 지속적인 조사와 분석이 필요한 영역이다. 따라서 2011년과 2012년 탈북한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가 향후 지속적인 연차별 조사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동시에 다양한 연구기관들이 이와 같은 조사들을 수행하여 북한사회의 변화에 대한 연구들이 체계적으로 확대 및 발전하고 그를 바탕으로 북한체제의 변화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평가와 전망이 실증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진행되기를 또한 기대한다.

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 통일학연구 17

북한사회변동 2012-2013

인 쇄 2014. 04. 30
발 행 2014. 04. 30
발행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발행인 박명규
저 자 박명규·장용석·정은미·송영훈
등 록 119-82-67975 (2006.7.7)
주 소 151-742 서울 관악구 관악로 1
전 화 02) 880-4052-4, 874-7304
팩 스 02) 874-7305
홈페이지 <http://tongil.snu.ac.kr>
디자인 (주)다해미디어 (02-722-7123)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사도서목록(CIP)

북한사회변동 2012-2013 : 시장화, 소득분화, 불평등 /

저 자 : 박명규, 장용석, 정은미, 송영훈,

-- 서울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4

p. ; cm. -- [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 통일학연구 ; 17]

ISBN 978-89-968013-8-2 93340 : ₩9000

북한 경제[北韓經濟]

북한 사회[北韓社會]

320.911-KDC5

330.95193-DDC21

CIP2014014350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4

이 보고서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사전 서면 허락없이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